

## 韓國과 『臺灣』의 政治的 關係 --- 過去, 現在, 未來

李奎泰

- I. 서론
- II. 쌍방관계의 地政學的 要因
- III. 80년대 이전 雙方의 政治的 友誼와 競爭
- IV. 80년대 이후 雙方의 政治的 友誼와 矛盾
- V. 韓國과 中華民國의 政治的 斷交
- VI. 韓國과 『臺灣』의 새로운 關係의 摸索
- VII. 『臺灣』의 對北韓關係의 摸索
- VIII. 결론

### I. 序 論

‘自由中國’이라는 호칭은 冷戰時代에 反共을 國是로 삼고 있었던 韓國人들에게는 친숙한 하나의 國號였으며, 臺灣의 中華民國에게 ‘韓國’도 역시 ‘反共同盟’으로서 친숙한 하나의 國號였을 것이다.

그러한 친숙함은 단순한 反共이라는 이데올로기의 同質性 때문만이 아니라, 國土의 分斷이라는 공통된 현실 때문에 더욱 뚜렷하였다.

물론 '大韓民國臨時政府' 시절 중국대륙에서의 관계를 포함한 역사적인 政治的 文化的 紐帶關係에서 기인한 일종의 감정의 연결고리도 그러한 친숙함의 중요한 원인이었다.

이러한 감정적 형식적인 관계에서의 친숙함에도 불구하고 쌍방관계의 실질적인 내용의 발전은 늘 일정한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예를 들면 양국은 간밀한 軍事·政治적인 상호교류를 하여 왔으나 중공과 북한과 같은 政治軍事同盟의 결성은 실패하였으며; 經濟的인 협조와 보완성을 논해왔으나 國際市場에서의 競爭은 피할 수가 없었고; 동일한 歷史·文化적인 悠久한 紐帶를 논해 왔으나 상대방의 존재와 가치에 대한 서로 矛盾되는 認識의 問題를 해결하지 못하여 왔고; 學術的으로 도 1949년 이후의 當代 雙方關係를 다룬 한 권의 專門書도 兩國에서 출판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늘 '反共友邦', '傳統友誼'라는 外交修辭로써 쌍방관계를 강조하여 왔을 뿐, 실질적인 관계의 제반문제에 대한 深度있는 접근을 회피하여 왔다. 결국 1949년 이후 쌍방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일보 일보 퇴보하는 묘한 현상을 초래하였다.

특히 70년대 이후에는 東西和解關係의 발전과 더불어 국제정계에 있어서 이데올로기가 점점 퇴색되어 가면서 實利를 중시하게 되고, 이런 추세 속에서 韓國도 北方政策을 발전시키면서 中國大陸의 中共政權과 관계를 모색하게 되었다. 결국 중공이 제시한 '一個中國'의 원칙을 韓國이 수용함으로써, 1992년 8월 24일 政治적인 '中華民國과 大韓民國'의 關係는 끝이 나고, 1993년 7월 '臺灣과 韓國'의 관계로 새로운 '실질적인 국가관계'를 시작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責任이 어느 편에 있는가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이야기 될 수가 있겠으나, 쌍방의 총체적인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만은 우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따라서 쌍방관계의 제 분체점들을

계통적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政治·地理的인 요소와 東北亞의 國際的인 環境에서부터 國民들의 歷史·文化認識과 양국이 처한 內外環境과 政策등에 다양하게 내재하는 모든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토록 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미 늦은 감은 있으나 이러한 쌍방관계에 대한 深度있고 理性的이며 公閉적인 討論만이 장래의 兩者關係를 건설적으로 발전시킬 수가 있는 捷徑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러한 전제 하에 본 논문은 1949년 이후 臺灣時期的 中華民國과 大韓民國關係를 역사분석법과 내용분석법을 통하여 검토해 봄으로써, 과거와 현재의 문제점들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이를 근거로 이미 최악의 상태에 처한 韓國과 中華民國關係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쌍방관계의 地政學的 要因

### 1. 地政學的 國際關係에서 重要性

독일의 地緣政治學者인 라첼(Fredrich Ratzel)은 '일국의 역사는 周邊國家의 歷史의 일부분이다'라고 하였고, 칸트(Immanuel Kant)는 지리학은 '자연의 총체이자 역사의 기초'라고 하였을 정도로 地緣的인 要因은 모든 국가의 역사와 대내외정책의 중요한 조건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인 환경은 기후, 지형, 자연적인 위치, 상관적인 위치, 面積등의 자연적 지리와 인구, 자원등을 포함한 인문경제지리등으로

1) 沈默, 現代地緣政治-理論與實際 (臺北: 三民書局, 1979) p.17에서 인용.

際政治에 있어서 각국의 生存과 發展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인정되어지고 있다.<sup>2)</sup>

따라서 길핀(Robert Gilpin)은 현대세계에서 영토통제의 중요성은 줄어들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국제생활의 핵심질서의 메커니즘(central ordering mechanism of international life)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sup>3)</sup>

비록 인간의 역사는 人間이 주도하여 왔지만 자연적인 환경, 즉 국토의 형상, 면적, 자연적 상관적인 위치 등은 모든 國家行爲의 動機的, 手段的, 혹은 자극과 反應의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정치지도자를 포함한 각 국민의 '마음속에 政治地理的 映像'(images of political geography in their minds)이라는 '心理地圖'(mental maps)<sup>4)</sup>를 형성하게 함으로써 對內外政策의 장기적인 결정요인으로 되어 왔다.

예를 들면 백카인더(H.J. Mackinder)의 '심장지대론'(Heartland Theory), 스파이크만(N.J. Spykman)의 '邊緣地帶論'(Limland Theory)은 냉전시대 미소의 대외정책의 중요한 근거였으며; 傳統中國의 中華思想은 일종의 문화적인 정치지리적인 '심리지도'로 형성된 것이었고; 소련의 대외확장정책도 지리적인 요인이 중요한 결정요인이었다고 볼 수가 있다.

## 2. 韓半島와 臺灣의 地政學的 關係

韓國과 中國의 역사에 있어서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인 관계도 바로 지리적인 요인을 기초로 발전하였다고 할 수가 있으며, 한국의 對外

2) Saul Bernard Cohen, *Geography and Politics in a World divided*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71), pp.29-58 참조.

3) Robert Gilpin, *War and Change in World Politics*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p.37.

4) Patrick O'Sullivan, *Geopolitics* (New York: St. Martin's Press, 1986), pp.2-3.

政策에 있어서 행위의 가장 중요한 동기가 바로 韓半島라는 지정학적 위치 논리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특히 韓國과 中國의 역사적인 관계는 중국대륙, 즉 中原의 中國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며, 중국 동북방 소수민족 국가와의 관계는 늘 中原中國政權과의 관계의 설정에 따라서 결정되어지고 조정되어졌으며, 中原中國政權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행위패턴을 유지하여 왔다.<sup>5)</sup>

때문에 1949년 이후 이데올로기적인 東西의 兩極冷戰體制 아래서 中原의 共產黨政權인 中華人民共和國과는 關係가 단절되고, 중국의 邊方이라고 할 수가 있는 臺灣島에 있는 中華民國과는 동맹관계를 유지했지만, 韓半島의 地政學적인 戰略關係 때문에 中共政權과의 관계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心理地圖'가 한국의 정치지도자들과 일반국민들의 마음 속에 늘 살아있었다.

6. 25대 中華民國의 蔣介石總統의 군사지원 재외에 대해 中共參戰의 가능성을 이유로 한 이승만대통령의 거절; 中華民國에 대한 政治的 軍事的인 관계발전에서 초기의 증공정권의 발전에 따른 觀望의인 비직극적인 태도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도 할 수가 있다.<sup>6)</sup>

80년대 중반 이후의 中國中原의 증공정권과 관계개선 積極性과

5) 고려시대에 中原中國政權인 宋나라와 東北方의 遼, 후에 金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 遼, 金의 상대적인 세력의 우세로 고려는 그들과 '公式關係'를 宋과는 '非公式關係'를 유지했으나 宋나라를 중심으로 對中國關係를 사고하는 행위의 패턴은 포기하지 않았으며, 문화, 경제를 중심으로 상호관계를 유지하면서 '오랑캐'와는 단순한 정치적인 '형식적 관방관계'만을 유지했었다. 그것은 당시에 형성된 일종의 戰略三角關係로 韓中關係의 역사에 있어서 독특한 관계구조였으며, 1992년 8월 24일 이후에 臺灣, 中國大陸, 韓半島의 南北韓의 4개의 정권사이의 구조의 발전에 많은 示唆點을 제시해 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

6) 입설에 따르면 李承晩大統領이 6.25전쟁이 발생한 이후에 臺灣의 蔣介石中華民國總統의 지원군과관계의를 거절한 이유 중에 하나가 '中共의 參戰'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었으며, 中華民國의 駐韓초대대사인 薛壽顯대사의 신임장수용을 6개월 이상 연기한 것은 薛대사와 金九의 관계등도 있었지만, 당시 대만해협영안관계 즉 中共과 中華民國의 발전을 관망하였기 때문이라고한다. 事實, 韓國外交秘史(서울: 기린사, 1980), p.71; 薛壽顯, 使韓回憶錄(臺北: 傳記文學出版社, 1980), p.177참조.

상대적인 臺灣과 中華民國과의 關係에 대한 소극적이고 회피하는 태도 등도 근본적으로 그러한 지정학적인 전략가치의 평가에 근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

1949년 이전의 大陸時期的 中華民國과 그 이후의 臺灣時期的 中華民國의 외형적인 가장 큰 차이는 무엇보다도 인문지리적인 環境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러나 태평양상의 하나의 섬으로서 中國大陸의 동남해상에 있으며 약 200해리의 臺灣海峽으로 중국대륙의 福建省과 마주보고 있는 臺灣島는 남지나해, 남태평양, 중국대륙,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인도양과 연결되는 해상교통의 중심으로서 중요한 지리적인 전략요충에 자리잡고 있다.

19세기말 일본의 동남아와 중국으로의 대외확장정책의 첫번째 목표가 臺灣(1895년 청일전쟁후 일본이 식민지화)이었으며; 1949년 이후에는 미국의 對中共政權의 防禦戰略(Containments Strategy)의 최전선으로서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여 왔으며, 월남전을 수행하면서 중요한 보급기지로서의 역할을 해 왔다.

이러한 점에서 臺灣은 東北亞에 위치한 韓國의 對東南亞과 太平洋과 인도양의 해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함은 틀림이 없다. 중공정권은 앞으로 1997년 귀환될 홍콩과 특구로 건설중인 海南島, 그리고 南沙群島 등을 중심으로 막강한 항해권과 해군을 발전시키므로서 동북아와 태평양, 인도양에 있어서의 전략균형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것은 틀림이 없다.

7) 1894년 임본문부성대신인 井上毅가 총리 伊藤博文에게 제출한 한 건의서에서 臺灣의 중요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 바가 있다. 즉 "세상사람들은 朝鮮을 반드시 爭取해야할 것으로 말하고 있으나 臺灣을 최우선으로 經營해야할 것임은 모르고 있다. . . . 臺灣을 經營한 자는 黃海, 朝鮮海, 日本海의 항해권을 장악할 수가 있고, 東洋의 門戶를 열 수가 있다. 神龜와 八重山群島와 연결되어있으며, 이를 연결하면 타국을 제압할 수가 있지 않느냐? 만일 이 섬이 타국의 손에 들어가면 우리의 神龜諸島가 상당히 위험하며, 이해가 상반될 수가 있다." 陳志奇, 美國對華政策三十年(臺北: 中華日報社, 1981), p.60에서 인용.

臺灣까지 중공정권의 통제하에 전략적으로 이용될 때, 東亞와 太平洋 그리고 인도양의 전략적인 균형은 근본적으로 무너질 수가 있다. 때문에 냉전시대에는 중공을 견제하는 중요한 기지로서 中華民國政權과 臺灣은 그 역할을 수행했으며, 앞으로도 미국과 일본 유럽 각국의 대중공정권의 정치적 견제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현재 中華民國이 통치하는 臺灣島, 澎湖島, 金門島, 馬祖島, 그리고 東沙群島를 포함한 '臺灣地區'는 면적에 있어서 中國大陸의 0.38%일 뿐이고, 인구에 있어서도 0.2%에 불과하므로 국제정치에서의 전략적인 가치평가에 있어서 불리할 수 밖에 없었다.

결국 대외관계에서 중공정권이 점점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었으며 1971년 미국과 관계의 개선, 그리고 유엔에서 中華民國을 대신하여 회원국으로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으로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국제적인 지위가 근본적으로 역전되었다.

이러한 쌍방의 대외관계의 경쟁에 있어서 역전의 가장 중요한 원인을 찾는다면 바로 지정학적인 우열에 있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이며, 그 다음으로 중공의 '一箇中國政策'과 中華民國의 '漢賊不兩立'이라는 一箇中國政策의 경직된 대립이었을 것이다.<sup>8)</sup>

동북아의 非強大國로서 韓半島의 韓國에게 中國大陸의 중공정권은 臺灣보다는 훨씬 높은 전략적 가치가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사실상

8) 中華人民共和國과 中華民國의 수교국가의 숫자의 변화.

년	50	60	66	69	70	71	72	74	79	80	88	89	90	92
臺北	44	59	66	69	57	56	43	32	23	23	22	26	28	29
北京	23	42	51	50	54	74	92	104	127	130	141	136	139	155

이상의 자료는 衛民, 中華民國의 雙邊外交, (臺北: 國家政策研究中心, 1991), p.2 "李登輝總統國情報告", 中國時報, 1993.1.5.; "李鵬政府工作報告" 人民日報, 1993.4.2.

한국과 臺灣은 역사적인 특별한 연결의 고리가 없었으며, 일본식민지 시대 몇몇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이 反日活動을 한 경험만이 있었을 뿐이며, 蔣介石 國民黨主席이 대만으로 옮겨가면서 쌍방관계가 발생하였고, 이어서 中華民國政府가 옮겨감으로서 실질적인 쌍무관계가 발생한 것 뿐이다.

面積이나 人口, 그리고 자연자원 등의 인문지리와 경제지리적인 입장에서 中國大陸은 臺灣보다 월등히 우수하며, 정치군사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중국대륙은 압록강, 두만강(그리고 육지국경이 약 40여 KM)를 경계로 한국과 약 1300여KM의 국경선을 공유하고 있으므로,<sup>9)</sup> 역사적으로 쌍방관계의 전략적인 중요성을 ‘唇亡齒寒’이라는 말로써 표현하여왔다.

반면에 한국에게 東支那海를 지나 멀리 隔해 있는 臺灣은 전략적인 가치에서 중국대륙에 비교되어질 수가 없는 위치에 있다고 할 수가 있다. 이런 관계로 인하여 한국당국의 中國大陸의 中共政權에 대한 관심은 점점 배가될 수 밖에 없었고, 상대적으로 臺灣의 中華民國과의 관계는 70년대 이후 국제정치의 탈이데올로기화와 東西關係의 和解라는 구조적인 변화 속에서 퇴보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지정학적인 고려는 한국의 對臺北과 對北京政策의 기본구조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 III. 80년대 이전의 雙方の 政治的 友誼와 競爭

#### 1. 政治的 紐帶의 基礎: 共同抗日과 反共同盟

9) 王守春, 謝天治編著, 中國邊疆地理 (北京:人民出版社, 1990), p.8

## 가. 共同抗日

地政學으로 隔한 관계로 인하여 특별한 정치적 혹은 경제적인 關係가 없었던 臺灣과 韓半島는 1949년 蔣介石 당시 國民黨總裁가 臺灣으로 移南하면서 政治적인 關係를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政治的인 관계는 이후 양국 관계를 주도하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었다.

中華民國과 大韓民國關係의 기초는 1945년 이전 中國大陸에서 쌓은 '大韓民國臨時政府'와의 상호 지원관계 속에서 형성된 反日本共同戰線이라는 政治的 紐帶로 소급될 수가 있다. 金永三政府가 공식적으로 中國의 '大韓民國臨時政府'를 大韓民國의 正統政府로 인정함으로써 그러한 政治的인 유대관계의 의미는 더욱 중요해졌다.<sup>10)</sup>

中華民國과 大韓民國臨時政府의 관계는 1921년 4월 孫文이 中華民國政府를 정식으로 성립한 후 臨時政府에서 呂云弘, 申奎植등 공식대표를 파견 상호관계를 시작하면서 시작되었다. 孫文이 사망한 후 그를 이은 蔣介石도 臨時政府를 계속 지지 지원하였으며 1937년 中日戰爭이 시작된 이후 공개적으로 대대적인 지지와 지원을 하였다. <sup>11)</sup>

물론 당시 中華民國政府는 미국과 英國의 반대, 내부의견의 불일치, 자신의 대외정책상의 연약함, 한국에 대한 認識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臨時政府를 지원하면서도 실질적인 승인받았고 正式으로 政治的

10) '大韓民國臨時政府'의 정통성의 계승(임시정부의 法統繼承)이라는 차원에서 金永三정부는 중국대륙의 임시정부요인들의 유해 봉환사업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지난 8월초에 이미 申奎植선생을 포함한 5위의 유해가 봉환되었다. 韓國日報, 1993.8.6.

또한 상해 임시정부청사도 이러한 차원에서 이미 노태우대통령 당시 복원한 바가 있다. 그러나 臨時政府의 정통성과 그와 상관된 中華民國정부와 國民黨의 臨時政府에 대한 막대한 지원의 역사를 생각한다면, 中華民國과 斷交하고 中華人民共和國와 수교하는 우리의 외교적인 자세는 정통성과 실리추구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모순된 것임은 틀림이 없다.

11) 大韓民國臨時政府와 中國政治勢力들의 관계에 대하여는 沐潯, 孫志科, 大韓民國臨時政府在中國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92); 李炫熙, 大韓民國臨時政府史 (서울: 김문당, 1982); 胡春惠, 韓國獨立運動在中國 (臺北: 中華民國史料研究中心出版組, 1976)등 참조.

承認을 하지는 않았다.<sup>12)</sup>

中國을 포함한 어떤 국가로부터도 正式承認을 획득하지 못한 臨時政府는 1945년 일본이 항복한 후 미국과 소련의 韓半島問題의 주도과 中華民國國際地位의 약화로 부득히 해체되었다. 또한 그후 김구와 이승만의 내부의 정치권력투쟁등으로 인하여, 독립 후 한국에서 政治的인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막대한 물질 인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臨時政府'를承認하지 못했던 것은 臺灣時期 中華民國의 韓國問題대한 역할감소의 간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다.<sup>13)</sup>

그러나 이러한 危機時代의 共同抗日的 기초 위에 형성된 막강한 人脈과 友誼는 臺灣時期의 中華民國과 大韓民國의 상호관계의 기초가 되었으며, 이러한 인맥은 박정희시대까지 韓國과 中華民國의 중요한 정치세력을 형성, 쌍방의 전통우의와 정치적 관계를 유지하는 기초가 되었음을 부정할 수가 없다.

#### 나. 反共同盟의 時代

1949년 말 臺灣으로 철퇴한 中華民國政府는 大韓民國政府 수립과 聯合國에서의 承認過程 등을 통해서 政治적인 적극지지를 다시 보냄으로써 새로운 국제 환경하에서 정치적 同盟關係를 더욱 심화시켰다. 그 政治적인 同盟의 가장 기초적인 토대는 다음 아닌 反共이라는 政治적 이데올로기였다.

12) 胡春惠, 앞의 책, pp.385-389.

13) 胡春惠교수는 그러한 中華民國當局的 한편으로 적극적이고 한편으로는 문제가 있었던 당시의 援韓政策을 논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這一段中國對韓國獨立運動的援助歷史, 雖然在執行有著失察之處, 是對中國與復興後的大韓民國之間, 在日後外交合作的立場上, 以及中韓兩民族友誼的基礎上, 都發揮了良好的影響力, 但這種影響力是局限於感情上的, 而在兩國未來應付國際國勢上, 却并未打下穩固的合作基礎, 與中國當今援韓政策未能執行, 顯然有著重大關係.” 胡春惠, 앞의 책, p.389.

中華民國은 '유엔한국임시위원회'(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UNTCOK)의 7개의 회원국의 하나로 정부수립 과정에서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반대하던 인도의 네루수상을 설복하여,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통하여 大韓民國政府 수립이 가능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하였으며, 정부수립 후에는 미국에 이어서 두번째로 1949년 1월 4일 大韓民國정부를 승인하였다.<sup>14)</sup>

이러한 상호승인은 중국과 한국의 역사에 있어서 최초의 평등한 主權國家로서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미 中國大陸에서 형세가 기운 中華民國이 1949년 12월 廣東에서 臺灣으로 철퇴할 때, 함께 철수한 유일한 외국대사관이 바로 大韓民國人使館이었으므로, 실질적으로 臺灣에서 中華民國의 첫번째 외국대사관이 바로 大韓民國人使館이었다.<sup>15)</sup>

중공정권과 북한정권의 성립, 그리고 6.25전쟁(중국에서는 韓國戰爭 혹은 朝鮮戰爭이라고 함)을 거치면서 쌍방관계에 있어서 反共이라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共助體制는 더욱 선명한 '反共同盟'의 형식으로 발전하였다.<sup>16)</sup>

14) 당시 中華民國駐印度大使는 羅家倫대사였으며, 羅大使는 당시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반대하던 '연합국한국임시위원회'의 장국인도의 네루수상을 설복하여 남한만의 단독선거가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이승만대통령은 羅大使에게 문화훈장을 수여한 바 있다고 한다. 상관자료는 羅家倫, "大韓民國誕生過程中的一段外交史", 問題與研究(臺北), 第1卷10期(1962. 7), pp.11-14참조.

15) 당시 大韓民國政府는 초기에 재정이 매우 빈약하였으므로 대사관의 운영경비가 매우 빈약하였다고 하며, 中華民國政府는 과거 임시정부시절 부터의 인종의 관례로 당시 臺北의 大韓民國人使館의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초기의 이승만정부의 대외활동의 경비문제와 駐中華民國人使館의 경비문제에 대하여는 朴眞, 앞의 책, p.50.참조.

16) 1949년 8월 國民黨總裁신분의 蔣介石은 한국의 鎭海를 방문하여 광둥으로 '아시아반공연맹'의 결성을 추진하였으며, 이 회의가 '共同抗日'에서 '共同反共'으로 양국 관계가 새로운 조형되는 역사적인 회의였다고 할 수가 있다. 물론 주권국가로서 中華民國과 大韓民國이 국제분쟁을 공동으로 협의한 최초의 최고지도자의 회의였다고 할 수가 있다. 그러나 韓中兩國이 주도하려고 한 아시아반공연맹은 미국의 마오적인 반대태도에 따라 초기에 적극적이던 쾨리핀의 퀴리노(Elipidio Quirino)대통령이

특히 6.25 전쟁은 양국의 '共同反共'의 정치적인 유대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기회도 되었으며, 이미 蔣介石의 中華民國에게서 '손을 때려 고' 한 미국이 다시 中華民國과 안보관계를 정립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물론 6.25전쟁 당시 韓國의 운명도 당시 中華民國과 中共의 관계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으며, 그것은 쌍방의 운명적인 고리를 말하여 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다.<sup>17)</sup>

같은 분열국가로서 공산정권에 대항하는 동일한 정치적인 환경 아래서 쌍방은 운명적으로 反共友誼를 발전할 수 밖에 없었다. 당시 美國의 공산국가에 대한 포위전략의 아시아의 중요한 전초기지로써 韓國과 中華民國<sup>18)</sup>은 쌍방관계에 대한 특별한 전략적인 고려가 필요 없었으며,

정치군사동맹에서 경제문화동맹으로 태도를 바꾸고, 일본의 참여에 대한 한국과 中華民國의 상반되는 입장등으로 건국 성사되지 못하였으며, 그후 民間反共聯盟으로 탄생하였으며, 한국과 中華民國이 이 조사를 주도하였다고 할 수가 있다.

17) 6.25전쟁은 中國과 韓國의 4개의 정권이 冷戰體制 아래서 정치적인 生存을 모색하는 새로운 기초를 마련한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고 볼 수가 있다.

(1) 北韓은 중공정권의 지원으로 생존과 새로운 통치기초를 마련할 수가 있게 되었고;

(2) 韓國은 중공의 연합국가가입문제를 이유로 안전보상회의에 소련이 참여하지 않으므로서 연합국군의 파견이 가결되어, 이를 계기로 이미 한국의 전략적인 방위를 포기한 바 있던 미국과 연합국군의 공동의 지원을 받음으로써 生存할 수가 있었으며;

(3) 中華民國은 한반도에서 공산정권의 전쟁을 통한 확장정책을 확인한 후 공산정권의 확장정책을 견지해야 하겠다는 美國의 전략전환으로 다시 安否를 보장받을 수가 있었고(미국은 1948년 8월 중국문제에 대한 白書를 발간 蔣介石의 中華民國에 대한 실질적인 손 때를 정책을 표명한 바가 있다);

(4) 中華人民共和國는 韓國전쟁의 참전과 抗美援朝運動으로서 내적으로 불치기반을 강화할 수가 있었으며 미국등 국제연합국군과 대항에서 '勝利'함으로서 국제사회와 한반도에서 미국, 소련과 동등한 지위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도 볼 수가 있다.

18) 미국은 中華民國의 蔣介石政權(1949년 5월 1일 다시 총통으로 복권)에 대하여 일종의 방관적인 정책을 표명하였으며(1949년 8월 6일 발표한 중국문제백서가 대표적인 내용), 韓國과 中華民國의 전략적인 중요성에 대하여서도 1950년 1월 12일 국무장관인 에치슨의 설명으로 포기한(미국의 서태평양의 전략방위선에서 제외) 바가 있다. 그리고 이에 앞서 1949년 3월 맥아더도 그와 유사한 내용의 아시아안방위선을 주장한 바가 있다. 조셉 골든(Joseph C.Goulden: 約瑟夫·格登), 朝鮮戰爭: 未透露的內情, The Untold Story of the War(중어 번역판) (北京: 解放軍出版社, 1990).

오직 '兄弟之邦'이라는 傳統友誼와 反共同盟이라는 외교적인 수사만 반복하면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1971년까지 연합국의 안전보장회의의 상임이사국으로서 中華民國은 미국과 더불어 거부권을 행사 북한정권을 철저히 반대해 왔다.

따라서 蔣介石에서 蔣經國으로 이어지는 중화민국의 절대적인 反共의 堅持, 한국에서 이승만에서 박正熙군사정권까지의 反共과 勝共의 절대적인 견지와 그것에 기초하여 발전시킨 두터운 政治적인 人脈으로 쌍방관계에서 傳統과 政治이네올로기적 優先考慮는 70년대 말까지 그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 2. 쌍방관계의 矛盾의 出現과 發展

### 가. 50년대의 反共同盟의 虛實

초기의 운명적인 '共同反共'의 政治적인 紐帶는 형식적인 면에서, 혹은 '감정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원만하였으나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이미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다. 만일 오늘날 中華民國과 韓國과의 쌍방관계의 문제의 근본원인을 찾는다면 여기에서부터 논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中華民國은 초기에서 부터 政治적인 의미에서 외형적으로 兄弟之邦으로서의 최고의 우의를 堅持하고 있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1954년 '아시아민족반공동맹'을 창설한 후 계속해서 이를 '世界人民反共同盟', '世界青年反共同盟' 등으로 발전시킨 반공동맹체제의 主導이다. 그러나 中華民國과 韓國이 중심이 된 反共同盟은 사실상 시작

p.24; Soon Sung Cho, Korea in World Politics 1945-1950: an Evaluation of American Responsibilit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7), pp.259-261. 즉 中華民國과 韓國은 한반도전쟁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미국과의 반공동맹에 실질적으로 포함되지 못한 공동의 운명도 있었다고 할 수가 있다.

초기 부터 미국의 비협조와 일본가입문제에 대한 양국의 입장차이 등으로 정치군사동맹으로서의 정부간의 조직이 아닌 틈간조직으로 탄생하였으므로, 냉전체제의 구조 속에서 '反共'의 정치적인 구호만을 제창하는 것을 제외하고 사실 실질적인 의의가 부족하였다.

또한 中華民國이 중국대륙을 중공정권에게 넘겨줌으로써 제 2차 세계대전 말기에 얻은 강대국 정부로서의 지위가 급격히 하락하였고 이에 韓半島問題에 대한 기반도 이미 상실하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다. 예를 들면 미국과 소련 그리고 영국은 1945년 모스크바 三國外相회담을 개최하면서 한국에 대한 미국, 소련, 영국과 中華民國의 4국의 신탁통치를 결정하였으나, 이를 미리 中華民國과 商議한 바도 없으며, 사후 통지한 것 뿐이었다. 이러한 中華民國의 국제지위의 변화로 한반도에서 미국과 소련의 경쟁 중에서 仲裁役割을 자청하고자 했던 中華民國의 희망은 사라지고 말았다.<sup>19)</sup>

비록 6.25전쟁이 미국의 대공산권정책을 전환케 함으로서 中華民國과 새로운 군사동맹관계로 발전하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나, 한반도에서 中華民國의 영향력은 계속 줄어들었다. 1950년 10월 연합국에서 '연합국한국임시위원회'를 '연합국한국통일부흥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for Unification and Reconstruction of Korea: UNCURK)로 재조직하는 과정에서 中華民國의 원래의 대표권은 취소되어 버리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6.25전쟁이 발생한 이후 中華民國은 4번의 군사지원을 제의했으나 중공군의 개입을 두려워한 미국의 참모본부와 이승만에 의하여 완곡한 기절을 당하였다.

반대로 중공은 人民志願軍을 파견하여 한반도 문제에 군사간섭을

19) 1946년 12월 5일 國民黨總裁 蔣介石은 외교부에 보낸 전문(國民政府對電, 府軍義字99號)에서 韓半島에서 미군과 蘇聯軍당국에 '同等連絡'을 취함으로써 '외교상 超越立場'을 견지, '美蘇橋梁'으로 '兩者關係'를 이용하고, '韓國臨時政府分子'들을 적극지원하며 華僑들과 인락을 강화하여 '對韓外交資本'으로 삼는 것은 對韓半島基本政策을 말한 바 있다. 薛昇顯, 앞의 책, p.75 참조.

성공하였다. 따라서 中華民國의 韓半島問題에 있어서의 영향력은 크게 감소한 반면, 중공의 영향력은 절대적으로 증가하였다. 中華民國의 그러한 상대적인 영향력의 감소를 보면서 당시 駐韓中華民國 대사인 薛大使는 다음과 같은 말로 이를 표현하였다.

參事既無可參，武官亦無用武，從此大使變小事，記者亦已不稀奇。<sup>20)</sup>

이러한 中華民國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상대적인 영향력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1953년 11월 이승만대통령은 終戰 후 처음 해외방문으로 中華民國을 택하였으며, 이 방문을 통하여 양국은 '같은 소련공산주의의 아시아침략의 앞선 희생자'(等以蘇俄共產主義在亞洲侵略之首先犧牲者)로서 반공연합전선을 조직할 것을 합의하고, 다음 해 초(1954년 1월 23일) 중공군 중에서 반공포로를 석방, 臺灣으로 보냄으로써 쌍방반공우의를 공개적으로 과시하기도 하였다.

이어서 양국은 1954년 6월 '아시아민족공공연맹'(Asian People Anti-communist League: APCAL)이라는 民間反共聯盟을 조직하고 이를 1967년에는 '世界反共聯盟'으로 발전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반공동맹은 조직의 성질상 민간활동의 범주에 그쳤으므로, 그 정치적인 역할의 한계는 분명하였다.<sup>21)</sup> 또한 1956년 이후 한국과 中華民國은 '韓·中·越結盟'을 시도, 이를 공개적으로 진행했으나, 미국의 소극적 태도, 그리고 동맹의 영도권의 문제에 대한 갈등 등으로 이를 실현하지 못하기도 하였다.

한국전쟁 이후 中華民國과 韓國이 각각 미국과 안보동맹을 맺어 미국의 보호아래 있었으므로 양자간의 적극적인 동맹의 필요성이 없었

20) 앞의 책, p.107.

21) 반공연맹의 발전과 상관문제에 대하여는 世界反共聯盟中華民國分會編, 世盟亞盟發展紀要(臺北: 世界反共聯盟中華民國分會, 1971) 참조.

다는 것도 정치군사동맹의 결성 실패의 중요한 원인의 하나라고도 볼 수가 있다. 또한 中華民國은 1952년 이미 '中日和約'을 체결하여 일본을 아시아의 동맹국으로 인정하였으나, 이승만을 포함한 한국정치지도자들의 反日感情은 이를 수용할 수가 없었으므로 쌍방의利害가 서로 상충되어 타협하지 못하였다.

#### 나. 60년대의 反共同盟의 限界

中華民國이 중요시 한 일본이 1958년 중공 당국과 종래의 貿易條件에 政治條款을 삽입하는데 동의한 '第4次 民間貿易協定'을 체결한 후, 中華民國은 종래의 일본과 결맹에 의한 反共이라는 아시아정책을 조정할 수 밖에 없었고, 따라서 1961년 등장한 한국의 군사정부와 새로운 발전된 관계를 모색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물론 한국도 1961년 북한의 金日成이 소련과 중공을 각각 방문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협정'이라는 軍事同盟條約을 체결한 후, 아시아의 반공동맹인 中華民國과 더욱 발전된 관계를 맺지 않을 수가 없었다.

中華民國과 韓國은 1961년 '貿易協定', 1964년 11월 '友好協定', 1965년 5월 '文化協定'등을 체결하고, , 1966년에는 한국, 중화민국등 주도 아래 '아시아태평양아시아화'(ASPAC)를 성립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대만을 방문하는 등 정치, 군사, 경제, 문화교류를 통하여 쌍방관계를 進一步발전시켰다.<sup>22)</sup> 그러나 그 '友好條約'의 내용은 북한과 중공의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협정'의 政治軍事同盟과는 비교될 수 없이 허약한 전통우의만을 강조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 다. 70년대의 現實主義外交와 矛盾

1971년 中華民國이 연합국에서 축출되고(물론 中華民國은 축출결

22) 당시 中華民國과 韓國의 상호교류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中國國民黨中央文化工作會, 外交建設(臺北: 正中書局, 1984), pp.137-139, 175-176. 참조.

의가 있기 전에 스스로 포기하였다)난 후 중공정권의 국제영향력의 급등과 상비례해서 中華民國의 영향력은 지극히 열세해졌으며, 이를 계기로 中華民國에게 있어서 외교상 “困危痛苦의 10年” 혹은 ‘國際孤立’의 70년대가 시작되었다.

中華民國과 중공정권의 국제적인 지위의 급변 속에서 韓半島에서 남북으로 대립하고 있던 韓國은 대외정책에 있어서 중공정권을 더욱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으며, 상대적으로 中華民國에 대한 실질적인 관심은 변화할 수 밖에 없었다.

한국과 中華民國 쌍방은 다사는 정치군사동맹이니 하는 문제를 언급하지 않게 되었으며,<sup>23)</sup> 1970년 5월의 ‘中韓航空臨時協定’, 1972년 3월 ‘상호특허권보호협정’(相互保護專利協定), 1972년 7월 ‘상호해공운소득세면세협정’(互免海空運所得稅協定)등의 실무협정을 체결한 후, 進一步 발전한 어떤 정치적인 雙務條約도 체결하지 않았으며, 전통우의와 반공을 강조하면서, 경제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현실적인 實務가 쌍방관계의 주류를 형성하게 되었다.

미국과 중공의 화해동의 급속한 동서관계의 변화 속에서 韓國은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1970년대 들어와서 對북한, 對共產圈의 開放이라는 새로운 정책을 시작하였다. 1970년 ‘8. 15선언’을 계기로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남북교류를 통한 통일이라는 새로운 정책을 제시, 남북한의 격리된 무한정의 대립관계를 ‘對話있는 南北對決의 時代’로 전환시켜 보려고 했다.

1971년 부터 남북적십자회담이 열렸으며, 1972년 7월 4일에는 남북한의 비밀특사교환에 의한 ‘7. 4남북공동성명’을 발표, 정치적인 차원에서 南北對話 동료인 ‘南北調節委員會’의 설치가 합의되었다. 이어서

23) 1970년 1월 미국을 방문한 蔣經國행정원장이 닉슨에게 中華民國, 韓國, 월남, 태국으로 구성된 집단안전체제로 공산정권에 저항할 것을 제의했으나 이미 중공과 관계개선을 결정한 닉슨은 이에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1973년에는 '6. 23 平和統一 外交政策宣言'을 발표, 급변하는 동서관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남북한의 내정불간섭과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그리고 理念과 體制가 서로 다른 나라와도 門戶를 개방한다는 共存政策을 선언하여 북한등 공산국가에 대한 開放이라는 정책을 제시했다.<sup>24)</sup>

#### 라. 韓國의 對共產圈 開放과 中華民國의 失望

지금까지 절대적인 共同反共을 견지해온 韓國政府의 國際環境變化에 따른 北韓과 中共政權을 포함한 공산정권들에 대한 門戶開放政策은 中華民國으로서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1974년 당시 행정원장이던 蔣經國은 이러한 한국을 포함한 자유국가들의 행위에 대한 우려를 개괄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즉,

今天許多國家，明知共黨毒素的禍害，但是爲了眼前的苟安，却隨逐姑息主義的逆流，陷於所謂的『對內反共』和『對外親共』的矛盾，去與共匪『和解』，與共匪『建交』，殊不知這樣措施已爲亞洲埋下了大東亂的禍根。<sup>25)</sup>

中華民國은 세계적인 東西和解의 조류에도 불구하고,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로서 자신의 '反共'의 입장만은 절대적으로 견지하고, 대외정책상 '漢賊不兩立'이라는 '홀스타인 원칙'을 포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1974년 '6. 23특별선언'을 통해 이미 이를 포기한 한국과 대외정책의 원칙에 있어서 큰 乖離현상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물론 쌍방의 傳統友誼와 기본적인 反共이라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었으나, 쌍방의 정치적인 관계는 이미 現實과 形式에 있어서 상당한 乖離현상을

24) 통일원, 통일백서(서울: 통일원, 1990), pp.28-36.

25) 蔣經國, "在驚濤駭浪中的鼓浪前進" 蔣主席言論集-施政報告(臺北: 中央文物供應社, 1986), p.92.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가장 단적인 예가 바로 大陸棚海底資源開發과 관련 증복된 해저석유개발구(Oil Prospecting Sector)의 문제의 타협을 위하여 1970년 11월 한국, 일본, 中華民國 등 삼국이 협의 성립한 '連絡委員會'가 중공당국의 거센 항의로 무산된 후, 日本과 韓國이 中華民國을 排除하고, 1974년 1월 유효기간 50년의 '大陸棚共同開發協定'에 서명한 것이다. 이것은 실무적인 차원에서 中共政權과 관련되어서 大韓民國이 中華民國을 처음으로 냉대할 사건이었던 것이다.<sup>26)</sup>

그러나 이러한 화해시대라는 국제형세의 변화와 한국의 對共產圈에 대한 개방태도의 발전 가운데 1975년 월남의 赤化는 中華民國의 절대적인 반공정책의 현실성을 '認證'해주는 사건이 되었다. 따라서 蔣經國총통은 다시 한번 '對外親共, 對內反共'은 적어 손을 쓸 필요도 없이 '內外交困而自行傾倒'할 수 있는 '순진한 생각'(天眞的想法)임을 경고하였다.<sup>27)</sup>

물론 이러한 中華民國과 한국관계의 모순, 경쟁적인 관계는 해저자원의 개발문제 뿐만 아니라 양국의 경제발전과 더불어 경제적인 경쟁에서 더욱 심화되었으며, 그러한 경제적인 경쟁관계가 양국의 정치적인 관계에도 상당히 불리한 영향을 주었다고도 볼 수가 있다.(쌍방의 경제관계 참조요)

이러한 다방면의 모순관계가 누적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쌍방관계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연구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예를 들면 中華民國에서 국제문제연구에서 가장 권위있는 國際關係研究中心이 출판하고 있는 '問題與研究' 월간에 남북한의 정치경제문제에

26) 中華民國, 韓國, 日本 등 해양공동개발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기록은 釣約寒風雲(臺北: 雲天出版社, 1971), pp.43-46; 白根旭편역, 中共石油: 石油紛爭要因과 한국입장(서울: 도담, 1988); 王肇隆, 中共海底石油開發之研究(臺北: 文化大學大陸問題研究所碩士論文, 1987)등 참조.

27) 蔣經國, 蔣主席言論集, 앞의 책, p.198.

대한 연구, 혹은 아시아반공문제 등을 다루는 논문은 다수 있었으나, 中華民國과 韓國의 쌍방관계의 문제를 전문으로 논하는 논문은 70년대 말까지 한편도 실리지 않았었다. 기타 중·한관계를 논하는 연구잡지등에도 전통우의, 역사문화적인 관계를 논하는 글은 있었으나 당대의 쌍방관계의 제반문제에 대한 토론은 거의 없었다.

물론 한국에서는 이 기간을 통하여 경제적인 문제를 제외하고 中華民國研究 자체가 거의 행해지지 않았으며, 中華民國을 소개하는 전문서적이 한 권도 출판된 적이 없었다. 결국 이런 학술풍토도 쌍방의 국민들은 전통우방인 韓國과 '自由中國'의 존재는 인식하고 있었으나, 쌍방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사고하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 3. 쌍방의 經濟關係發展과 競爭

일본이 항복한 후 韓國의 對外經濟關係의 주류는 1946년의 한국의 수출의 81.4%와 수입의 91.5%를 차지한 中華民國 즉 중국대륙이었다. 그리고 1950년 대만의 中華民國과 무역방문단을 교환한 후 쌍방은 새로운 무역경제관계를 시작했다. 그러나 대륙의 형세의 변화와 6. 25등을 거치면서 이러한 대외무역구조는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양국은 경제발전의 기본적인 방향, 경제구조, 공업화의 과정 등에서는 서로 다른 특징을 가졌지만<sup>28)</sup>, 자원의 부족, 국내시장 협소 등의 동일한 조건으로 인하여 輸出主導型經濟政策을 취함으로써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은 피할 수가 없었다. 특히 輸出地域이 冷戰的인 국제 체제 아래서 미국, 일본등의 특정지역으로 한정됨으로써 양국의 競爭은

28) 한국과 臺灣 두지역의 경제모델과 발전방향의 비교연구는 스쿠마키 야스오(박경수역), 臺灣對韓國 (서울: 해돋이, 1992. 4); 西村敏夫(丁祖威譯), 外國人看中韓經濟 (臺北: 經濟日報社, 1985) 등 참조.

심화될 수 밖에 없었다. 예를 들면 1975년 양국의 10대 輸出國에서 7개국이 동일국가였으며, 1980년에도 이와 마찬가지로였다.<sup>29)</sup>

또한 10대 수출품의 내용에 있어서도 비슷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면 1위의 紡織品이 1975년 한국수출의 56.2%; 중화민국 수출의 27.8%, 1980년에는 한국수출의 29.2%; 중화민국수출의 22.3% 등이었다.<sup>30)</sup>

결국 양국은 國際市場에서 철저한 경쟁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따라서 쌍방은 1967년부터 '韓中經濟合作會議' 등 경제관계 실무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면서 상호경제관계의 增進 노력을 하였으나 쌍방의 교역은 1974년 2억 2천만 달러에서 1975년에는 1억 7천만달러, 1억 6천만 달러(1976년)로 감소하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비록 쌍방의 적극적인 협조노력에 의하여 1978년에는 2억 87만달러로 증가는 하였으나, 양국의 무역총액에서 쌍방국가가 차지하는 비율은 1980년까지 1%정도, 즉 1980년 한국의 輸入총액 중에 中華民國의 것은 1.0%(1979년 1.2%), 중화민국의 수입총액 중에 한국의 것은 1.1%(1979년은 1.2%)였고; 1980년의 한국의 수출총액에서 中華民國의 것은 1.2%(1979년은 1.1%), 中華民國의 수출총액에서 한국의 것은 1.3%(1979년은 1.1%) 밖에 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러한 1% 내외의 점유율은 80년대 말까지 계속되었다.<sup>31)</sup>

따라서 80년대 초까지 쌍방의 경제적인 競爭關係는 정치적인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유리한 환경을 제공해 주지 못했다고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쌍방은 '韓中經濟合作會議'(1967년부터 시작)와 '韓中經濟協力委員會, 韓中經濟協進委員會聯席會議'와 기타 각 방면의 항공, 해

29) "한국지구별수출 구조변화", "韓國10대수출국의 변화", "中華民國地區別輸出構造變化", "中華民國10대수출국변화" 등은 임운남, 한국과 중화민국양국간의 교역증진에 대한 연구(서울: 건국대학교무역학과 석사논문, 1989), pp.56-59 참조.

30) "한국10대수출상품추어"와 "中華民國10大輸出上品推移", 앞의 책, pp.53-54 참조.

31) 西村敏夫(이현재譯), 앞의 책, p.59.

운, 관세등의 실무회의를 통해서 상호보완적인 경제관계를 강조하면서 관계개선을 계속 추진하였다. 특히 對日赤字問題의 공동대응, 서방의 보호주의의 공동대응을 중심으로 合作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정치관계가 발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경제실무회담이 쌍방관계의 발전에 끼치는 영향은 자연히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양국의 존재는 흔히 경제발전등의 비교연구의 중요한 대상으로 雙方의 국민들에게 인식됨으로써 그러한 경제적인 競爭意識은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었다.

#### IV. 80년대 이후의 雙方의 政治的 友誼와 矛盾

##### 1. 양국의 對外政策의 변화와 쌍방관계의 矛盾의 深化

가. 中華民國의 “總體外交”에서 “實質外交”로 發展

국제적인 고립을 피하기 위하여 1978년 총통에 취임한 蔣經國은 자신이 行政院長 취임한 1973년 이후 진행해 온 反共의 전제 아래 경제, 기술, 문화관계의 발전을 도모하는 ‘總體外交’를 진일보 발전시켜, 이를 실질적인 내용을 중시하는 ‘實質外交’로 부르면서 적극적인 대외 정책을 진행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反共의 기본입장의 견지라는 中國國民黨의 체제적인 보수성으로 인하여 ‘既定政策’의 한계를 탈피할 수가 없었다. ‘漢賊不兩立’의 ‘一個中國’ 원칙을 절대적으로 견지함으로써 실질적인 외교적인 ‘需要’에 의한 ‘彈性’과 ‘既定國策’인 ‘堅強反共’의 모순을 극복하기가 상당히 곤란하였다.<sup>32)</sup> 또한 1971년 연합국에서 中華民國의 축출에 성공

32) 蔣經國總統의 반공사상은 장개석총통의 반공정신과 더불어 자신의 소련에서의 직접경험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러나 국제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현실주의적이었음은 틀림이 없다. 그는 “外交是一種利害而已”, “關志而不歸氣”

한 증공정권이 각종 국제기구에서 '代表權'과 '國號'문제를 제기함으로써 中華民國의 국제지위를 비하시키고 고립시키려고 노력하였다.

하지만 미국과 단교는 하였으나 미국은 '臺灣關係法'(The Taiwan Relations Act)라는 국내법을 제정 국내법의 형식으로 臺灣과의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中共의 간섭을 배제하면서 양국의 '실질적인 국가관계'는 안정적인 발전을 계속하였다.<sup>33)</sup>

또한 中華民國은 1980년 '對外工作協調會報'라는 정부 부처 간의 대외업무 협조단위를 만들었으며,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다양한 연락대표처를 각국에 성립하기 시작하였다.<sup>34)</sup> 또 1982년에는 '駐華外國機構豁免條例'를 제정 미수교국의 臺灣사무소 인원에게도 서로 다른 정도의 외교관 예우를 해 줄 수가 있도록 함으로써 상대국가에서 같은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동시에 國號의 문제에 있어서도 각종 다른 형식을 수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국제관계사에 있어서 전례가 없을 정도로 다양한 형태와 명칭으로 대외관계를 발전시킬 수가 있었다. 그 국가의 칭호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奧會模式'(국제올림픽모델)의 '中華臺北奧會'(Chinese Taipei Olympic Cnnitte); '亞銀模式'(아시아개발은행모델)의 '中國臺北'(Taipei, China)등을 서로 나르게 사용하였다.<sup>35)</sup>

라고도 하였으며, 또한 "受國際之侮每已不知多少次, 我非不知羞之人, 惟不願爲了一時之氣, 而害大事"라고도 하였다. 辛燕軒, "從蔣經國的心理探討臺灣對外關係", 八十年代中華民國外交(臺北: 風雲出版社, 1990), pp.58-59에서 인용.

33) 예를 들면 1971년의 中華民國과 美國의 무역총액은 12.674억달러였으나, 1978년에는 72.865억달러로 발전하였다.

34) 예를 들면, 中華民國을 앞에 붙인 경우가 '中華民國駐科威特商務辦事處'(중화민국 쿠웨이트상무사무소)등 11개국가의 12개이며, 기타 '遠東', '自由中國', '臺北'등을 앞에 붙인 '經濟文化辦事處'(예: 駐馬來西亞臺北經濟文化辦事處), '商務處'(예: 駐泰國遠東商務處), '貿易中心'(예: 駐希臘遠東貿易中心) 등과 '孫中山中心'(예: 駐西班牙孫中山中心)과 일본의 '亞東關係協會東京辦事處', 미국의 '北美事務協調委員會駐美國辦事處'과 기타 駐香港中華旅行社 등등의 다양한 형식으로 1991년 7월까지 51개국의 미수교국에 78개의 정식외교기구를 파견하고 있었다. 衛民, 앞의 책, pp.11-18, pp.87-100참조.

비록 蔣經國총통의 반공 정치사상의 견지로 인한 대외정책상의 반공, 반중공의 한계를 극복하지를 못하였을지라도,<sup>36)</sup> 경제역량을 기반으로 한 대외관계의 발전은 지속되었다. 예를 들면 1973년 12월 중화민국이 가입한 국제비정부간 조직의 수는 246개였으나, 1989년 3월에는 이미 728개(1992년 6월까지 776개)로 증가하였다.<sup>37)</sup> 따라서 中華民國의 對韓半島政策도 이러한 蔣經國總統의 反共과 實質需要라는 서로 모순된 입장에서 접근되어졌다고 볼 수가 있다.

#### 나. 한국의 정치세력의 개편과 ‘北方政策’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미 70년대 말 부터 중국대륙과 간접교류 관계를 시작한 韓國은 현실주의적 입장에서 中華民國과 형식상의 官方關係에도 불구하고, 중공정권과 관계를 개선하는 행동을 더욱 공개적으로 진행하기 시작하였다. 1979년 박정희대통령이 암살된 후 한국의 정치계는 대변동, 대개조의 과정을 거치면서 中華民國과 밀접한 관계를 지녔던 구정치 인물들이 물러났다. 또한 새로운 진두환 군사정부는 내적인 국민들의 정치적인 불만의 해소를 위해서 대북한, 대북방정책에 있어서의 돌파를 시도함으로써 대중국정책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對中國관계의 국면 전환 중에 무역경제관계를 제외한 80년대 초에 발생한 ‘突發事件’들이 큰 촉진작용을 하였다. 1982년 10월 발생한 吳榮根의 한국을 경유한 臺灣投降사건(중화민국에서는 이들을 反共義士

35) 이 두가지 이외에도 명칭에 있어서는 中華民國을 사용하는 곳(예: 國際關稅出版組織 등), ‘中國(臺灣)(China(Taiwan))’, ‘中國臺灣(Taiwan, China 혹은 China Taiwan) 등등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林正義等著, 臺灣加入國際經濟組織策略分析(臺北:國家政策研究中心, 1990), pp.17-20.

36) 80년대 초에 수리남, 리비아등 국가들이 中華人民共和國와 수교하면서 동시에 臺北와 관계를 정상화할 것을 재의했으나 臺北은 이를 거절하기도 했다.

37) 林正義等著, 앞의 책, 참조.

라고 함)을 시작으로, 1983년 5월의 '中國民航機事件'이라 불리어지는 중국대륙인 6인의 중국민항 납치 비행기탈출사건, 1985년 2월의 '中國海軍魚雷艇事件'등을 포함하여 1986년 馬曉濱등 19명등에 이르기까지 80년대 한국을 경우 中華民國으로 투항한 중국대륙인들이 약 30여명에 이르렀다.

한국은 이들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中華人民共和國과 정식 접촉을 시작하였다. 특히 '中國民航機事件'의 처리를 위해 쌍방은 건국 이래 최초로 답판을 하고 비망록을 남겼다. 또한 어뢰정사건에서는 중공당국의 입장을 고려, 사건연루자를 포함한 모든 장비인원을 국내외의 인도적 견지에서 강력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中國大陸으로 송환함으로써 중공당국과 우호적인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외에도 1984년 3월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청년농구대회'에 中華民國과 中華人民共和國이 동시에 참가한 기회를 이용하여, 한국정부가 국제올림픽위원회의 명칭의 규정에 따라 中華民國國號의 사용을 거부함으로써 중화민국대표팀이 김포공항에서 울면서 철수한 사건등은 한국의 중공정권에 대한 가장 분명한 우호의 표시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한국과 중공당국의 다각도의 접근에 대하여, 中華民國은 '一廂情願' 식이니 혹은 '弊屣秋波'라고 비판하면서 한편으로 현실적인 입장에서 '異中求同'과 '競爭과 合作'의 관계를 발전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이때 이르러 중화민국과 한국은 傳統友誼나 反共盟友등의 정치적 구호는 이미 상호관계를 지탱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님을 명확히 깨달았다고도 볼 수가 있다. 결국 한국의 지극히 현실주의적인 對中華人民共和國의 접근에 대하여 中華民國은 견제할 뚜렷한 조건이 없었던 상태에서 상호관계는 經濟中心이라는 실무적인 차원으로 변형되어 갔고, 政治的인 관계는 疏遠해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쌍방의 중요인사의 상호방문내용에서 알 수가 있다. 예를 들면 1984년에서 1992

년 단교시까지 쌍방을 방문한 최고위 인사는 국회의외장(中華民國의 입법원장)이었고, 국무총리(中華民國의 행정원장)가 각각 방문하였으나, 공개적으로 대외정책을 담당하는 외무부장관(1988년 2월 中華民國의 당시외교부장이 행정원장 俞國華의 노태우대통령 취임축하사절단 일행으로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음)의 업무협의라는 실무적인 상호방문은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외에는 실무의 경제관료를 중심으로 '韓·中經濟合作會議', '韓中經濟協力委員會', '韓中經濟協力會議', '韓中關係會議(한중새관회의)', '韓中水果會議'(한중과일회의) 등의 실무회의를 통한 경제기술방면의 실무관료들의 상호방문이었으며, 가타 軍, 국회의원, 문화, 학술 등의 의례적인 쌍방교류가 행해졌을 뿐이다.<sup>38)</sup>

특히 전두환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정일권전총리를 포함한 親中華民國의 현직 정치인물이 거의 사라진 상황에서, 中華民國은 쌍방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전두환대통령의 동생으로 당시 새마을운동의 지도자로 활약하고 있던 全敬煥을 對韓國關係의 주요통로로 이용하였다. 그러나 제6공화국의 노태우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 5공화국과 관계단절 의미에서 전두환과 더불어 전경환을 숙정함으로서 臺灣에서 상당한 물의를 빚은 일이 있다.<sup>39)</sup> 물론 이 과정에서 中華民國의 보수적인 인사들에 의한 '兄弟之邦'이라는 전통적인 對韓國觀念과 새로운 정치세력들에 대한 소홀한 취급; 한국의 중공정권과 대비하면서 中華民國을 무시하는 태도는 쌍방의 政治關係를 더욱 악화시키는 작용을 하였다.

38) 1984년에서 1990년 사이의 中華民國과 韓國의 상호방문인원의 내용에 대하여서는 외무부, 中華民國概況(서울: 외무부, 1990. 3), pp.63-64참조.

39) 自立晚報(臺北), 1977. 4. 16; "從「全敬煥事件」來看中韓關係", 中國時報(臺北), 1989. 3. 28.

## 2. 새로운 政治的 關係鞏固의 노력과 실패

### 가. 相互經濟關係의 好轉

이러한 정치적인 관계의 矛盾 속에서 쌍방의 국제시장에서 경쟁도 더욱 심화되어만 갔다. 예를 들면 1984년 쌍방의 10대수출품 중에서 7가지 상품이 같은 것이었으며, 쌍방무역총액도 1981년의 5.8억달러에서 1985년에는 4.4억달러로 감소하였다.

한국의 대중공정권접근과 그에 따른 中華民國과 관계의 냉각으로 인한 정치심리적인 영향으로 양국의 傳統友誼나 反共同盟의 의미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퇴색하였으며, 여기에 경제적인 경쟁관계로 인하여 경쟁심리가 점점 격화되어 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 단적인 예가 바로 양국이 경제문제를 중심으로 비교하는 경쟁적인 심리현상이 더욱 빈번하여 졌다는 것이다.

쌍방은 이러한 정치심리상의 모순, 경제적인 경쟁의 모순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1985년 제 18차 '韓中經濟合作會議'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토론했으며, 해외투자, 금융, 해운, 과학기술협조 등 이외에도 貿易方面에 쌍방이 서로 상대방의 물건을 구매해 주기로 합의하는 등, 쌍방의 무역문제의 해결과 對日赤字문제도 이를 통하여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합의하였다.'<sup>40)</sup>

1981년 쌍방은 국제적으로 1974년 체결된 國際海上人命安全公約의 실시를 합의하였고, 또한 1983년 '海運協定備忘錄'을 교환하였고, 1984년 1월 '海運協定'을 체결하였고, 1985년 7월에는 '韓中司法資料交換協定'을 체결하였으며, 1986년 11월에는 '韓中航空臨時協定'을 '空中運輸協定'으로 정식 조인하였다.

이런 노력의 결과 1986년 쌍방교역총액은 7.5억달러, 1987년에는

40) 經濟日報(臺北), 1985. 3. 7.

13.1억달러에 달하고, 1988년에는 18.18억달러, 1989년에는 23.7억달러, 1990년에는 25.5억달러, 1991년에는 30.34억달러로 급증하였다.<sup>41)</sup> 그러나 상대적으로 中國大陸과 한국과의 무역총액(간접무역포함)은 1988년에 이미 26.8억달러로 中華民國과 韓國과의 18.16억달러를 훨씬 넘어섰다. 결국 경제관계에서도 이미 中國大陸이 대만의 中華民國을 앞서가기 시작한 것이다.

‘中韓文化基金會’, ‘中華民國韓國學研究會’, ‘韓中文化協會’, ‘中韓中央民意代表友好協會’ 등 쌍방의 학술, 문화와 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단체들이 많이 성립하였으며, 또한 관광개방으로 쌍방의 교류인원이 80년대 후반에 급격히 늘어났다.(註40도표참고)<sup>42)</sup>

#### 나. 韓國의 ‘北方政策’의 現實化

앞에서 검토한 비정치적인 관계의 급속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쌍방의 정치적인 관계는 한국의 對中國大陸의 적극적인 접근 속에서 점점 냉각되어가면서 臺灣海峽兩岸의 두개의 中國과 韓半島關係는 새로운

41) 이상의 무역액은 中華民國外交部年鑑編輯委員會編, 中華民國外交部年鑑을 참고로 한 것임, 즉 中華民國七十七年外交年鑑의 p.106, 七十八,七十九年外交年鑑의 p.143, 八十年外交年鑑의 p.81, 八十一外交年鑑의 p.81을 참고한 것임.

42) 中國大陸과 中華民國의 韓國과의 80년대 후반기의 인원교류현황은 다음표와 같다.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華人	臺灣人	118,936	117,690	134,648	146,906	176,720	211,052	281,349
	大陸人		430	790	5,730	13,620	31,934	43,177
韓人	臺灣	20,060	29,005	24,980	54,726	97,010	107,878	122,528
	中國大陸		1,430	950	3,060	9,340	25,215	44,188

資料: 外務部, 中華民國概況, 앞의 책, p.63(1995에서 1989년자료)

朝鮮日報, 1992. 8. 25(1990에서 1991년자료)

배재현, 최근 한·중관계동향과 전망, 외교(계간) (서울: 외교협회, 1992.3), p.109.

구조로 발전되기 시작했다. 즉 종래의 中華人民共和國과 北韓의 社會主義同盟과 中華民國과 韓國의 反共同盟의 대립이라는 이원구조가 무너지고, 四者가 상호교류하는 구조가 발전하기 시작한 것이다.

선거운동기간 중에 반드시 '中國과 관계개선'을 공약한 노태우대통령이 1988년 새로운 한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함으로써 한국과 中華民國의 정치적인 관계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수 밖에 없게 되었다. 특히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의 서울올림픽에 소련과 中華人民共和國의 대표 대거 참여결정으로, 이미 동부유럽공산국가와 관계를 개선하고 있던 한국의 '北方外交'는 예측을 능가하는 속도로 발전하고 있었다. 1988년 7월 노태우대통령은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에 관한 특별선언'(7.7선언)을 발표 '모스크바와 북경을 우회하여 평양으로 가는' 北方外交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시작하였다.<sup>43)</sup>

당시 '韓半島平和와 民族再統...'을 기치로 내건 '北方政策'은 (1) 남북한이 각각의 友邦에 대한 문호를 개방하고 교류를 통해 友好協力 관계를 발전 시킴으로써 평화적인 한반도 국제환경을 조성하고; (2) 대공산국관계를 강화함으로써 탈진영, 전방위외교를 통하여, 특히 소련과 중공과의 관계개선을 통하여, 아시아의 변두리국가에서 세계의 중심 국가로 발전하며; (3) 경제적인 活路를 개척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었다.<sup>44)</sup>

1989년 2월 헝가리와 수교를 시작으로 한국은 동부유럽과 구소련과 차례로 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시작하였다. 결국 한국과 中華人民共和國과의 관계개선은 피할 수 없는 길이 되었으며 중공당국의 '一個中國' 원칙의 견지라는 상황에서 中華民國과 韓國關係의 변화도 가시화되기 시작하였다.

43) 외무부, 외교백서 (서울: 외무부, 1992. 2), pp.44-45.

44) 박철언, "民族進軍과 北方政策", 민족지성, 1989. 4. pp.188-189.

#### 다. 中華民國의 對外政策의 大변화

中華民國에서도 1987년부터 대내외정책이 큰 변화를 시작하였다. 우선 내적으로 1987년 7월15일 1949년부터 실시해 온 대만지역의 계엄을 해제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報禁'(신문출판자유금지), '黨禁'(정당설립자유금지)을 취소하는 對內民主化조치와 더불어 '探親'(친척방문)과 간접무역교류의 對大陸開放政策을 시작하였다. 또한 대외정책 방면에서도 비록 反中共政策을 견지, 三不政策(不接觸, 不談判, 不妥協)의 기본 방침은 변화하지 않았으나, '實質外交'를 더욱 탄성적으로 운용하여 1987년 한국에서 열린 국제마라톤대회와 올림픽축구 예선에 '中華臺北'의 명칭으로 참가하기도 하였으며, 또한 중공을 제외한 기타 공산국가들과 사안별로 交流接觸를 허락하였다.

이처럼 蔣經國총통은 대내외정책상 자신의 부친과 자신이 만들어 놓은 歷史的인 굴레를 스스로 벗겨준 후, 1988년 1월 사망하였고 李登輝부총통이 정권을 이어 받았다. 蔣經國총통의 生前 최후의 정치적인 按配라고 할 수 있는 1987년의 일련의 내외정책의 조치들은 蔣氏權威가 사라진 中國國民黨의 中華民國의 후계자들에게 '前 總統의 既定政策'의 견지라는 보수파에 저항할 수 있는 근거와 새로운 정치방향을 제공해 주었다고 말할 수가 있다.

李登輝총통은 대외정책에 있어서 蔣經國總統의 '實質外交'을 한층 강화하여, 대외관계를 확대 돌파하여 국제환경의 변화에 순응하려고 하였다.<sup>45)</sup> 이러한 의미에서 總體外交, 혹은 실질외교를 '務實外交'라고 고쳐 부르면서, '이데올로기와 역사의 굴레의 제약(受制於意識形態和歷史包袱)을 받는 외교정책을 끝내고 이를 대신하여 '現實環境에 중점을 둔 務實外交'를 주장하였다.<sup>46)</sup>

45) 李登輝總統이 中國國民黨第13次代表大會에서 제시한 대외정책, 外交部外交年鑑編輯委員會編, 中華民國七十七年外交年鑑, 앞의 책, p.82.

46) 張慧英, 外交日擊(臺北: 中國時報出版社, 1992), p.43.

이러한 '務實'의 관점에서 李登輝總統은 1989년 3월 미수교국이던 싱가포르를 방문 '臺灣에서 온 總統'이라는 稱號에 대하여 '不滿意, 但可以接受'(불만이나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현실적인 태도를 보였다.<sup>47)</sup>

이러한 務實外交의 단기적인 목적은 국가의 존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우방과의 관계 혹은 實質關係를 장취하고<sup>48)</sup> 국제조직에 참여함으로써 대외관계를 개척할 수 있는 어떤 기회도 포기하지 않고, 中華民國의 국제사회에서의 생존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고, 務實外交는 하나의 수단으로 장기적으로는 양안의 평화적인 경쟁을 통하여 自由, 民主, 均富의 체제 아래서 통일을 이룬다는 것이었다.<sup>49)</sup>

즉 '一個中國'이라는 기본원칙과 '三不政策'을 견지하면서, 민간의 대륙개방과 '務實外交'를 서로 결합하여 중공의 '一個中國' 원칙과 '一國兩制'에 대항한다는 것이었다. 비록 務實外交가 '金元外交'(돈으로 사는 외교)가 될 수 없다고 강조는 하였지만,<sup>50)</sup> 中華民國의 견실한 경제적인 부는 이러한 대외정책을 추진하는 중요한 자본이 되었다. 즉 1988년 '海外經濟合作發展基金'을 성립하여 제 3세계국가들과 관계를 발전시키는 자본으로 사용하였으며, 약 3천30억달러에 달하는 '六年國建'(1991-1996年國家建設)은 서방각국과의 관계개선의 중요한 조건으로 활용되고 있다.

47) 이러한 李登輝總統의 出國訪問은 대만시기 中華民國總統으로서의 두번째로서, 蔣介石總統은 1950년 3월 총통직에 복직한 이후 大陸을 光復하기 전에는 절대로 臺灣에서 한발자국도 나가지 않음을 맹세한 후 逝去할 때 까지 외국방문을 한 적이 없으며(1943년 카이로 회담, 1949년 國民黨總裁선분으로 권리편과 한국을 방문 아시아반공연맹을 논한 적이 있음), 蔣介石총통이 서거한 후 그를 이은 嚴家淦총통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한 적이 있고, 그를 이은 蔣經國은 총통으로서 외국방문을 하지 않았었다. 八十年代中華民國外交, 앞의 책 참조.

48) 1989년에서 1990년 사이에 中華民國은 이러한 '務實外交'의 원칙으로 중공정권과 이미 수교한 7개국과 수교하였으나, 잠시 후 "雙重承認"을 이유로 중공이 그들 국가와 단교하였다.

49) 外交部外交年鑑編輯委員會編, 中華民國八十年外交年鑑, 앞의 책, pp.74-75

50) 앞의 책, p.74.

다. 쌍방의 정치적관계의 재발전의 실패

이처럼 韓國과 中華民國은 1988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지도자 아래서 새로운 對外政策를 강력하게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한국의 北方政策은 中華人民共和國의 존재로 인하여 中華民國과의 정치적인 관계에 막대한 영향을 주기 시작하였다.

양국은 비록 '韓中傳統友誼不變'을 강조하면서 애써 현실적인 환경의 변화를 회피하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쌍방의 정치적인 관계는 경제관계와는 달리 급속도로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臺灣에서는 韓國의 노태우대통령의 취임 후의 北方政策의 발전에 비추어서 '中·韓關係'의 현실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기 시작하였다.<sup>51)</sup> 특히 당시 中華民國駐韓國鄒堅大使는 다음과 같이 새로운 현실적인 접근을 주장하였다.

國際關係是一分複雜而現實的，世界上沒有任何國家，會爲了他國利益而犧牲本國利益。在國與國之間，現在幾乎看不到道義，這是我們每個人都應瞭解的一點。所以，我認爲，就中韓關係而言，一再強調『兄弟之邦』，『傳統友誼』已經沒必要，只有我們有實力，中韓關係自然會更密切，而單以目前的形勢來看，我也認爲，我們應抱持樂觀的態度，不必因任何人一句話而有過激的反應。<sup>52)</sup>

이어서 鄒堅大使는 앞으로 中華民國이 對韓國經濟關係를 강화함으로써 정치관계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쌍방의 경제관계는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미

51) 王志文, "從國際法看中韓關係之可能變動模式", 中國時報, 1988. 2. 19; "南韓寄情『交义承認』與我關係無聲承有聲", 自立晚報, 1987. 9. 17; "不論誰當選開拉中共原則一致 對於中韓關係應以務實理性面對", 中國時報, 1999. 12. 18호 참고.

52) "訪鄒堅大使談中韓關係與未來外交政策", 青年日報(臺北), 1977. 1. 3.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中國大陸과 韓國과의 경제관계의 발전의 속도를 따라 잡기에는 부족한 상태에 와 있었다.(1989년 기준으로 대만과 한국은 23.7억달러; 중국대륙과 한국은 29.8억달러)

戰略三角關係의 성립은 三角의 각방이 모두 서로를 견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을 때 성립이 가능하다. 즉 첫째는 三角의 참가국이 모두 상대의 전략적인 特色을 분명히 인식하고, 둘째로 각방이 동등한 전략적인 중요성을 갖추고 있지는 못할지라도, 합법적이고 자주적인 참가국임을 승인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각도에서 韓國, 中華民國, 中華人民共和國의 三角關係를 살펴보면, 70년대 말부터 한국은 사실상 中國大陸의 中共政權의 안전, 경제 등에 있어서 전략적인 중요성을 臺灣의 中華民國보다 절대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다. 中華民國과는 비록 傳統友誼에 근거하여 官方關係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對中國政策의 중점은 이미 중국대륙 쪽으로 향하고 있었고, 中華民國과는 무역경제관계를 중심으로 쌍방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다.

對中國政策의 종합적인 전략평가에 있어서 中華民國은 이미 차선의 선택으로 전략하였다고 볼 수가 있다. 80년대 초가부터 한국은 자신을 '南朝鮮'이라고 부르던 중공정권에 대한 호칭에 있어서의 '中國' 혹은 '中華人民共和國'으로 예우해 주면서, 갖가지 통로를 통해 접근하고 상대적으로 中華民國을 고의로 '무시'하던 태도등에서 이러한 점은 분명히 알 수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韓國의 그러한 실리적인 對中共政權의 접근을 인지하고는 있었지만, 中華民國으로서는 이를 견제할 만한 어떠한 견제 수단도 가지지 못하였었다. 학술계에서 혹은 경제계 등에서 '북한카드'의 사용을 주장했으나, 자신에게 있어서 중공정권이 臺灣보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北韓이 중공과의 정치관계의 악화를 감수하면서 대만과 관

개선을 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였기에 그 카드의 효용도 한계가 있었다. 결국 한국과 관계에 있어 이러한 현실적인 대응과 전제카드가 부족한 상황 아래서 臺灣地域에서는 韓國의 증공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현실적인 대응과 더불어 감정적인 대응이 격화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예를 들면 1988년 한국의 외무부장관이 공개적으로 증공정권을 '中國', '中華人民共和國'으로 칭한 후, 臺灣의 언론에서는 韓國을 '南朝鮮', 혹은 '高麗'로 부르기도 하였다.<sup>53)</sup> 또한 당시 中華民國軍方에 의하여 가장 저렴한 순양함으로 구입하기로 잠정결정한 한국의 현대의 '蔚山艦'의 구매문제가 民意代表, 言論의 반대로 포기되어지기도 하였다. 당시 '蔚山艦' 구입으로 쌍방관계를 유지하고, 외교적으로도 남한의 北進政策으로 인한 '中國熱'을 평행잡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결국 감정적인 반대 요구 속에서 포기될 수 밖에 없었다.<sup>54)</sup> 물론 이러한 감정적인 용어리 속에는 역사적인 인식에 근거한 '韓國算老幾?'(한국은 몇번째냐?)나 하는 식의 '落後된 韓國'의 '錯誤認識'이 자리잡고 있었음도 부정할 수가 없을 것이다.<sup>55)</sup>

53) "稱中共爲「中國」地理因素?「高麗大使」狡辯自欺欺人!". 自立晚報, 1988. 8. 10.

54) 蔚山艦구매와 관련된 사건은 中國時報, 1989. 10. 10; 1991. 3. 7; 1991. 7. 27; 聯合晚報(臺北), 1988. 10. 31; 聯合報, 1988. 12. 12; 朝鮮日報(서울), 1991. 3. 8 등 참조.

55) 1986년 中華民國駐韓國 薛昇麟大使는 "知己知彼加強中韓關係"라는 문장 속에서 어떤 中華民國의 기자가 "한국잠실올림픽경기장까지 가는 지하철을 한국사람이 만들었느냐?"는 질문을 한적이 있음을 예로 들면서 中華民國에서 韓國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낙후한 韓國만을 이야기하고 신중히 발전하고 있음을 모르고 있다고 경각심을 일깨우는 말을 한 적이 있다. 自立晚報, 1986. 8. 1.

## V. 韓國과 中華民國의 政治的 斷交

### 1. 政治的 斷交 原因의 재고찰

中華民國과 韓國은 전통적인 中國과 韓國이라는 관계와 더불어 共同抗日과 이어지는 反共聯盟이라는 공동전선에 의하여 형성된 정치적 紐帶의 기초위에 상호관계의 틀을 발전시켰다. 70여년 쌓은 그러한 정치적인 紐帶關係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斷交를 하게 된 데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었다고 할 수가 있다. 그 중에서 특히 강조되어야 할 것을 다시 살펴보면 아래의 몇 가지라고 볼 수가 있다.

#### (1) 中華民國의 中國大陸 喪失

중공정권의 탄생으로 臺灣으로 철수한 中華民國은, 이미 대륙의 中華民國과는 다른 地政學的인 처지에 놓이게 되었으며 大韓民國의 中華民國에 대한 認識도 그 影響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다.

50년대에는 中華人民共和國은 6. 25전쟁에 참여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지위가 격상되었고, 반면에 中華民國의 參戰은 한국과 미국에 의해 거절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이 激減되었다.

70년대 중공정권이 유엔에서 中華民國을 대신하게 됨으로써 그 國際上 影響력이 크게 증가하였다. 韓國도 東西和解의 조류 속의 '安全戰略'의 입장에서 中華人民共和國을 포함한 공산권국가에 接近開放政策을 시작하였다. 따라서 反共과 '漢賊不兩立' 정책을 견지하던 中華民國과 韓國은 政治的 矛盾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70년대부터 양국의 국제시장에서 경제적인 競爭이 점점 격렬해짐으로써 그러한 矛盾의 범위가 점점 확대되었다.

80년대 이후 中華人民共和國이 社會主義現代化와 改革, 開放政策을 진행함으로써,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국에게 中國大陸市場이 강력한 誘

리를引發하였으며, 더불어 統一政策과 관련된 '北方政策'의 추진으로 韓國의 中國大陸과 中共政權에 대한 접근은 더욱 가속 확대되어졌다. 결국 이를 위해서 韓國은 중공이 제시한 '一個中國原則'을 수용하였고, 中華民國과 정치관계를 포기하여야 하였다.

## (2) 양국의 相對方에 대한 認識問題

양국은 비록 傳統友誼와 反共同盟을 강조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상대에 대한 評價에 있어서는 그러한 정치적인 술어에 못미쳤다. 中華民國의 과거의 韓國, 예를들면 大韓民國臨時政府시절의 韓國이 어쩌니 하는 맥락에서 '兄弟之邦'하는 의미와 現代의 主權國家로서 韓國민이 생각하는 금지의 民族主義가 기초가 된 '兄弟之邦'의 의미 속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中華民國은 韓國의 국제적, 경제적인 역할을 과소평가하였으며; 韓國은 臺灣을 中國大陸과 비교 中華民國에 대하여 觀望的, 消極的 政策을 취하였다.

예를들면 1950년대 駐韓中華民國大使館의 정식 외교인원은 겨우 몇 명이었으나, 당시 미수교국이던 일본에는 100여명의 직원을 상주시켰다고 한다. 韓國도 臺北의 駐中華民國大使館建物を 증축할 때, 常駐를 위해서 토지까지 구입 건물을 증축해야 함에도, 토지는 임대해서 건물만 세웠던 것도 그러한 中華民國未來에 대한 관망적인 자세가 작용했음은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다.

또 다른 예는 中華民國과 韓國은 쌍방의 관계가 40여년 지속되었고, 무역거래총액이 30억달러에 가까워왔지만, 쌍방은 모두 12개의 國家間 協定을 맺었었을 뿐이다. 그리고 이미 10여년 넘게 협상해 온 相互銀行支店의 교환설치는 1992년 단교할 때까지도 끝내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 반면에 1992년 4월13일 한국과 中華人民共和國은 미수교상태임에도 '中國銀行'과 '韓國外換銀行' 지점의 교환설치를 합의한 바가 있

다.

이러한 認識의 차이로 인하여 쌍방은 많은 영역에서 때때로 서로 相對方을 중요시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것들이 政治關係의 건실한 發展을 제한하였다.

#### (3) 韓國政治의 大變化와 中華民國의 保守外交

1980년대 韓國의 政治는 人的 構造的 大變化가 일어났으며, 이로써 建國 이후 中華民國과 친밀한 關係를 지녀왔던 政治指導者들의 대부분이 재2선으로 후퇴하거나 은퇴하였다.

또한 政權의 국민적인 지지기반이 취약한 제 5, 6공화국은 '北方政策'을 통하여 국민들의 內部不滿을 밖으로 향하게 하기 위하여, 급속히 中공을 비롯한 北方國家들과의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것이 몇몇의 신진 정치참모와 관료들의 成果主義, 官僚主義와 결합되어, 外交에 있어서 국제적인 信義나 道德보다는 實利와 成果를 강조하게 되었고, 中國大陸의 中공정권에 비해서 정치적 경제적 전략적 조건이 취약한 中華民國은 重視될 수가 없었다.

더불어 80년대 말기 이전, 즉 蔣經國時代 中華民國의 外交는 비록 '彈性'은 강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三不政策'의 원칙을 고수하고, '漢賊不兩立'을 포기하지 않음으로서 한국의 '北方政策'과 서로 조화를 이룰 수가 없었다.

#### (4) 外交通路의 梗塞

박정희정권 이래 해외주재대사의 상당수가 비전문직업의교관인 군인출신이 임명되었으며, 駐中華民國韓國人使에는 모두 그러한 軍人출신들이 파견되었었다. 따라서 전문적 계통적으로 兩國關係의 질적인 변화를 고찰할 수가 없었으며, 한국의 外交政策決定의 核心過程에서 中華民國은 유력한 대화의 통로를 점점 상실되게 되었다.

비록 中華民國이 한국과의 關係를 重視 最後에는 차관급의 전문의

교관 大使를 파견하였지만, 韓國의 外務部와 政治의 核心속에 親中國大陸傾向을 견제할 만한 親中華民國 勢力이 없는 상황에서 그러한 편면적인 政治關係의 유지노력은 효과가 없었다.

위에서 언급한 모든 認識과 態度문제에서 부터 政策상의 矛盾들은 斷交하는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노출되었다. 쌍방은 80년대 말에 이르러 이미 政治心理的인 環境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制度的 環境에 있어서도 相互政治的 既存關係를 유지시켜 줄 수 있는 條件이 모두 모호해졌다고 볼 수가 있다.

## 2. 中華民國의 정치적인 關係維持의 努力과 矛盾

### 가. 經濟關係의 強化

1990년 9월30일 한국과 소련이 수교함으로써 미국, 중공, 일본, 소련등 東北亞 四強에 의한 남북한의 교차승인에 대한 先例을 열었다. 이러한 소련의 對韓半島政策의 자극으로 10월20일 中華人民共和國은 한국과 民間貿易사무소를 서로 설치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대만해협양안의 두개의 中國과 韓國의 관계구조 변화는 可視化되기 시작하였다.

中華民國當局은 한국과 中華人民共和國關係의 발전을 주의하면서 그러한 발전을 從前 한국의 '一廂情願' 식에서 '政策化', 혹은 '目標化' 하여 적극적인 '시간표화' 하는 '매우 심각한 징조'(極不尋常的跡象)로 여기면서 다각도의 대책을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한국과의 관계상 중공정권에 비하여 전략적인 이익의 공유에 있어서 지극히 취약한 臺灣의 中華民國으로서서는 부득히 경제문제를 중심으로 상호정치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수 밖에 없었다. 中國大陸과 관계를 모색하는 한국도 전통적인 우의와 중공정권을 견제할 수 있는 정치세력으로서 中華民國의 가치를 고려, 쌍방관계의 새로운 구조에서

가장 유리한 실질이익을 爭取하고자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다.

우선 경제협력방면에 있어 쌍방은 지속적으로 對日赤字의 해소문제등과 함께 이를 위한 商品의 相互購買問題, 기술과 정보의 교류등을 토론했었으며, '大韓貿易振興公社'와 中華民國의 '對外貿易發展協會'가 양국이 제3국에서 수입하는 물건 중에서 상호구매할 수 있는 상품을 공동으로 연구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1991년 '大韓貿易振興公社'는 '우리나라의 수입품 중에서, 대만으로 전환가능한 상품의 調査'라는 자료를 펴 내기도 하였다. 또한 韓國은 쌍방관계의 증진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中華民國의 '아시아태평양경제회의(APEC)', '關稅와 貿易에 관한 일반협정(GATT)', '經濟合作發展組織(OECD)등의 가입노력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였다. 56) 이러한 협조 속에서 1990년의 쌍방교역의 총액은 25.5억달러, 1991년에는 30.344억달러(한국의 흑자가 약 4.598억달러)에 이르렀다.

#### 나. 政治的 同床異夢과 經濟的 競爭의 深化

이러한 經濟方面의 협조와 더불어 軍事方面의 협조도 상당히 밀접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즉 政治的으로는 비록 상당히 소원해지고 있었을지라도, 1991년 1년 동안 중화민국의 參謀總長(陳榮齡), 海軍總司令(葉昌桐), 空軍總司令(李文禮), 軍事情報局長(段宗文)등이 한국을 방문했고, 한국의 合參議長(鄭號根), 海軍參謀總長(金鍾浩), 特戰司令官(徐玩秀), 國防情報本部長(龍永一)등 최고지휘관들이 대만을 방문했었다. 57)

이것은 비록 군사동맹은 아니었지만 전통적으로 미국의 동맹국으로 반공연맹으로서 다져 온 軍事交流의 연속이었다고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군사교류마저도 政治的인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없

56) 양국의 경제문제를 중심으로한 각방면의 협조는 "1881年第24會," 中韓經合會議 '의 결론, 聯合報(臺北), 1991. 8. 3.

57) 青年日報(臺北), 1992. 1. 24.

었다.

사실상 中華民國과 韓國의 競爭局面은 종래의 경제적인 국제시장에서의 경쟁에서 총체적인 國家發展 즉 現代化問題, 政治的 民主化問題, 統一問題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다방면의 競爭現象은 양국의 언론, 특히 신문의 내용 중에서 잘 나타났다.

예를 들면 “中韓經濟策略的比較”(經濟日報: 臺北, 1986. 5. 10); “中韓紡織業各展所長”(經濟日報: 臺北, 1986. 5. 19), “小兄弟超越向前進, 老大哥速度差一載, 中韓經濟此消彼長情勢逆轉”(中國時報: 臺北, 1989. 6. 5) 등의 經濟問題에서부터 “中韓兩國政治競賽”(自立晚報: 臺北, 1987. 8. 1, 8. 3); “不要民主競賽中輸給韓國”(中國時報, 臺北, 1991. 6. 23) 등의 정치문제, 그리고 “主動出擊南韓北方政策開化結果: 兩韓同時加入聯合國, 得助天時地利人和兼備, 其條件與我目前三者欠缺情況不同日而語”(中國時報, 1991. 9. 27) 등의 외교통일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비교가 행해졌다.

이런 비교는 韓國에서도 마찬가지였으며, 특히 對外貿易收支, 產業構造, 外換保有率 등의 경제문제를 논할 때, 中華民國은 가장 중요한 비교경쟁의 대상이 되었으며, 아직까지도 경제, 산업구조, 국제경쟁력 등의 문제를 논할 때 ‘臺灣’은 가장 중요한 비교의 대상이 되고 있다.<sup>58)</sup>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한국이 금 15개로 중국대륙의 5개의 금메달보다 훨씬 나은 성적을 거두고 난 후, 臺灣海峽兩岸의 中國人들은 모두 ‘兄弟之邦’의 當年の 별것 아니던 ‘小老弟’의 성취에 대하여 한편으로는 놀라움을 한편으로는 굴욕감을 표시하면서, ‘兵敗漢城: 臺灣海峽兩岸中國人同時兵敗漢城’이라는 책을 출판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 속에서 ‘一定要學習韓國?’이라는 강한 경쟁적인 의문도 제시하고 있다.<sup>59)</sup>

58) “한국산 옷서 갈수록 고전”, 1993. 9. 3. 참조.

물론 이 책은 작가의 말대로 자신들의 체육정책을 검토하는 입장에서 쓴 것이지만, 그 책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韓國과의 강력한 競爭意識을 내포하고 있었다.

#### 다. “雙重承認”의提起

80년 말부터 中華民國의 언론들은 꾸준히 中韓關係의 정치적 미래 발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여만 갔다. 특히 1990년 7월 사우디아라비아에 斷交당한 中華民國은 한국과 중공정권의 관계발전도 필연적임을 전제로, 자신의 務實外交 성공의 轉機를 韓國에 대한 중공정권과의 同時修交 즉 ‘雙重承認’에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을 학계를 중심으로 공공연히 주장하기 시작하였다.<sup>60)</sup>

그러한 주장은 중공과 북한관계에 대한 변화가 ‘호혜주의’의 원칙으로 對中共修交的 전제조건이 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한국정부와 학계의 對中共修交慎重論과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었다.<sup>61)</sup>

그러나 중공당국의 대답만 기다리던 노태우정부로서는 ‘臺灣問題’로 인하여 수교과정에 문제가 생기게 될 것을 염려하였기에 中華民國의 그러한 접근에 쉽게 대답할 수가 없었고, 시종일관 ‘傳統友誼’ 등의 외교적인 수사로 문제의 핵심을 회피하였다.

사실 中共은 한국과 이미 민간대표부를 설치하였으므로 수교 자체가 급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90년대 들어서면서 경제력을 자본으로 급속히 對外關係를 발전시키고 있던 中華民國이 對韓國關係에서 ‘雙重承認’의 先例을 實現하게 된다면, 中共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對外政策

59) 趙瑜, 林將等著, 兵敗漢城: 臺灣海峽兩岸中國人同時兵敗漢城 (臺北: 風雲出版社, 1989) 참조.

60) “亞運效應催化中共南韓 臺灣北韓經濟交叉關係即將形成”, 中國時報, 1990. 9. 24.

61) “盧載源駐北京貿易代表部代表會見”, 서울신문, 1992. 3. 4; 金瓊元, “韓中關係의 條件”, 한국일보, 1992. 3. 11; 정종욱(Chong-Wook Chung) “Be Friends with Two Chinas”, NewsWeek(한국어판), 1992. 4. 15, pp.18-19.

의 기본틀이 무너질 수가 있는 중대한 문제가 될 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天安門事態’ 이후 서방의 외교적 경제적인 制裁를 돌파하기 위하여, 아시아 周邊國家外交를 강화하던 중공정권으로서 韓國과 修交함으로서 ‘周邊國家’와 정상관계를 완성하고, 남북으로 분단된 ‘韓半島’를 미국, 소련(후에 러시아), 일본과 세력균형의 지렛대로 이용할 필요가 더욱 높아졌다.

따라서 그러한 ‘雙重承認’의 주장이 韓國에서 政策化되기 전에 修交를 서두름으로써 최대한의 이익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다. 때문에 소련의 대한반도정책의 급속한 발전, 노태우대통령의 친중공성향과 임기만료 등등의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 1991년 말부터 중공당국의 수교태도가 적극적으로 변하게 되었고, 먼저 수교담판을 제의하게까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1992년 4월 이후 中華人民共和國과 수교담판을 시작한 韓國은 ‘노태우대통령 임기내’ 北方政策의 완수, 즉 중공정권과 수교라는 목표를 맞춰주기 위해 ‘臺灣問題’와 中華民國駐韓國大使館의 所有權(產權)問題에 있어 중공의 요구를 거의 수용하고, 반면에 중공과 북한과의 관계는 ‘자신의 內政問題로 수정불가’라는 주장을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修交’ 최우선의 對中國外交를 진행하면서도 한국의 외무부를 중심으로 한 외교실무자들은 韓國-臺灣-中國大陸의 三角關係 속에서 3者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상호관계조정을 추진한 바 있다.

그것이 바로 1991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APEC)에서 中華人民共和國, 홍콩, 中華民國등 3개의 中國政治經濟實體의 동시가입을 주선한 것이었다.

### 3. 한국의 關係維持努力과 APEC 模型의 實現 그러나 斷交

#### 가. 韓國의 主動的 새로운 關係構造推進

韓國과 關係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수교발표 당일까지 中共當局은 대외적으로 韓國과 中華民國關係의 조정등의 修交條件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적은 한번도 없다. 또한 한국도 中華民國과의 전통관계와 국민들의 정서를 고려 '中韓傳統友誼는 변할 수가 없다'는 외교수사로 문제의 핵심을 늘 회피하였다.

그러나 中華民國과 韓國은 모두 중공의 '一個中國'의 원칙에 변화가 없는 한 쌍방 정치관계의 대변화는 필연적이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으므로 장래의 관계구조 조정문제의 여러가지 가능성을 계속 연구하고 있었다.

韓國의 입장에서는 남북한의 대외관계에 있어 '두개의 한국'처럼 '두개의 中國' 사이에 동거리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最上策이었던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韓國은 그러한 '동거리관계'의 완전한 모형은 아니지만, 1991년11월 서울에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APEC)에서 中華民國, 홍콩, 中華人民共和國의 세개의 中國人 정치경제체제를 '三個中國人經濟體'라는 명의로 동시가입할 수 있게 주선함으로써 그러한 방향으로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며 또한 이를 성공시켰다.

이것은 中華民國이 아시아개발은행에서 官方의 대표로 中華人民共和國과 자리를 같이 하는 것 이외에 정부각료가 中華人民共和國의 관방대표와 '共存'하는 새로운 모형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이다. 그것은 당시 中華民國의 行政院長이 말한 것처럼 中華民國이 미래 國際性組織에 가입할 때, 이러한 방향으로 하나 하나 돌파할 수 있는 '經濟貿易外交의 新道路'<sup>62)</sup>를 제공해준 것이었다고 볼 수가 있다.

그리고 한국도 그러한 성공을 국제적인 '多邊秩序' 속에서 '外交力量'을 발휘한 증명으로 스스로 自評하였었다.<sup>63)</sup>

中華民國에서는 이를 두고 한국은 '체면과 이익'(面子和裡子)을 모두 얻고, 중공은 '체면'(面子)을 얻고, 中華民國은 '이익'(裡子)을 얻었다고 평가하기도 하였다.<sup>64)</sup> 즉 한국은 '두개의 中國'과 관계를 정립하는 새로운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雙邊關係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최대한 정치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가 있는 새로운 關係構造模型을 성공적으로 제시했다는 의미가 된다.

그것은 당시 中華民國이 추진하고 있던 務實外交 혹은 彈性外交의 原則과도 일맥상통하며, '雙重承認'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었으므로, 中華民國으로서는 상당히 기대해 볼 만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교실무진의 노력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당시 '北方政策의 완수'가 급선무이던 한국당국은 來韓한 당시 未修交國인 中華人民共和國의 외교부장인 錢其琛과 노태우대통령과의 담판만을 주선하고, 中華民國代表의 접견(국무총리접견만 주선)은 주선하지 않음으로써 외적으로는 中華人民共和國과의 관계개선 희망을 강력히 표시하는 편향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하지만 中華民國은 그러한 한국의 對中共政策의 現實的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한편으로는 장래의 對中共修交과정에서 APEC模型을 진일보 발전시켜서 정치적인 두개의 中國實體를 인정함으로써 中華民國의 務實外交가 현실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더욱 원숙한 외교수완을 희망하였다.

당시 韓國의 對中共政權에 대한 정치적인 접근을 견제할 뚜렷한

62) 당시 中華民國 각계의 '새개의 중국인경제체'의 APEC가입에 대한 반응은 中國時報, 1991. 11. 8; "重新國際舞臺的重要起點", 中國時報, 1993. 11. 12; "我們對參加亞太經濟合作會議的看法", 工商時報(臺北), 1991. 11. 12등 참조.

63) 서울신문, 1993. 11. 10.

64) 中國時報, 1993. 11. 13, 11. 15.

카드가 없던 中華民國으로서는 전통우방인 韓國의 그러한 배려를 기대할 수 밖에 없었다. 예를 들면 당시 臺灣의 최대일간지인 中國時報는 다음과 같은 평가를 실었다.

南韓這次充分展現了不同於往昔的圓熟外交手腕.南韓總理鄭元植會見我國代表團時說『南韓不急於與中共建交,也沒有建交的時間表』,這很明顯『安撫』臺北的作法;而昨天錢其琛抵漢城後不久,便與盧泰愚單獨會談三十分,這當然是南韓爲自己的北方外交所安排.如果南韓在未來能子圓熟地處理兩岸關係,從雙邊關係的推進謀求自己的利益,相信才能贏得兩岸民衆更多的尊敬.<sup>65)</sup>

#### 나. 韓國의 '圓熟한 外交'의 실패

그러나 中華民國의 그러한 한국의 한층 '圓熟한 外交'에 대한 기대는 일년도 못가서 1992년 8월 24일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밝혀졌다. 韓國은 中華民國과 정치적인 관계단절에 대한 사전의 어떤 협의나 조정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더 나아가서 中華人民共和國은 韓國과 臺灣關係의 악화를 위한 전술적인 필요에 의하여, 韓國은 '臺灣과 北韓'의 수교담판의 방해공작에 대한 연려 때문에, 비밀수교담판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1992년 1월 한국측의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金鍾仁(特使<sup>66)</sup>)와 그리고 中華民國측의 총동부비서장 蔣彥士(特使)의 상호방문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傳統友誼라는 외교적인 수사만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경제관계의 발전을 논하였을 뿐, 실질적인 관계의 조정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토론되지 않았었다. 한국은 蔣특사가 訪韓할 때 정식수교담판이 시작될 直前이었으나<sup>67)</sup> 이를 언급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서 종종의 원

65) "促成『三個中國』加入APEC南韓贏得了面子和裡子", 中國時報, 1991. 11. 13.

66) 中國時報, 1992. 1. 29.

67) 한국과 中華人民共和國은 1992년 4월 13일 북경을 방문한 이상육외무부장관과 錢其琛의 교부장의 제3차한중외무장관회담에서 수교담판의 시작을 합의하였으며, 한국정

인으로 수교사실 발표당일까지 간접화법만을 사용 中華民國當局에 통보하는 '秘密' 유지의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中華民國의 '圓熟한 外交'와 APEC 모델의 발전에 대한 기대에 커다란 失望을 줄 수 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한국 당국의 처사는 이미 사전에 비공식적으로 사실을 認知하고 있었고, 정치적인 관계변화에 대한 충분히 각오가 되어 있었고, 동시에 수많은 斷交의 경험까지 있는 中華民國 當局과 그 國民들에게 더할 수 없는 '배신감'을 줌으로써, 臺灣에서 이전의 어떤 국가와의 斷交에서도 볼 수 없었던 거대한 반감을 유발하고 말았다. 中華民國이 그 1년여 전에 새로운 관계의 구조까지 사전타협하면서 처리한 사우디아라비아와의 斷交狀況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결과였다.

부는 이어서 외무부, 청와대, 安企部를 중심으로 '中國修交交涉團'을 조직하여 수교담당인 '東海作戰'을 시작하였다고 한다.(월간조선, 1992. 10, pp.388-399) 중공측에서는 4월 15일 楊尚昆 中華人民共和國國家主席이 김일성 생일 기념차 북한을 방문하였다. (일반적으로 이때 중공당국의 남한과의 수교담판의 시작을 북한에 통보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어서 5월 2일 中華人民共和國와 韓國은 민간 '投資保障協定'을 맺었다. 그러나 한국은 5월 6일 中華民國總統 특사인 蔣彥士 총동무비서장이 한국을 방문하였으나 중공과의 수교담판의 시작을 통보하지 않았으며 실질적으로 5월 13일부터 제1차수교담판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7월 29일 제4차 수교담판에서 1992년 8월 24일 수교를 결정하였다. (8월 18일 북한과 중공은 中朝科學技術合作交流協定書에 서명하였다, 人民日報, 1992. 8. 19) 8월 8일 이상욱의 무부장관이 金樹基 中華民國大使를 만나 "한중수교교섭에서 실질적인 진전(substantive progress)"을 통보했으며, 한국과 중공의 修交소식은 8월 19일 中華民國立法委員會를 통해서 흘러나왔으나(20억달러차관결과 동시에), 당일 한국 정부는 이를 공식적으로 부인하였으며, 21일 金樹基대사에게 "한중수교"를 정식으로 통보하고, 21일 '斷交文書'를 전달했다.

당시 한국정부의 외교실무자는 수교소식을 통보하여 고위로 中華民國측이 먼저 발표하게 해줌으로써 中華民國의 체면을 살려주려 했다고 후에 말했으나, (중앙일보, 서울, 1992. 8. 25) 실질적으로 中華民國當局은 한국이 중공과 수교담판을 시작한 5월경부터 이를 認知하고 있었다고 하며, 이를 여러 경로를 통하여 수차에 걸쳐 한국 정부와 확인하려 했으나 한국 정부는 직접 이를 확인해 주지 않았다고 한다. 물론 한국 정부는 직접적이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인 화법으로 이를 통보했으며, 臺灣측이 지나치게 외교적인 단어의 의미에만 집착하였다고 반박하고 있다 (월간조선, 1992, pp.397-398). 물론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그 내막이 정확히 밝혀질 수가 있으나, 문제는 수교와 단교사실의 통보와 비통보의 사실 자체 보다는 사전관계조정을 회피했다는 데 있다고 본다.

때문에 양국관계의 속에서 접점함의 感情的 용어리는 더욱 커졌으며, 관계조정 에 대한 어떤 事前協議도 없었으므로 '非官方關係'를 재정립 하는 데 근 1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다시 말해서 우리 외교당국은 中華民國과 斷交하면서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던 '體面'도 잃고, 당연히 지킬 수 있었던 단기적 장기적인 '利益'도 잃어버리는 非圓熟한 外交를 하고 말았다.<sup>68)</sup> 물론 앞으로 현실주의적인 입장에서 쌍방의 지도체계의 개편등과 더불어 그러한 감정적인 충격은 극소화될 수가 있을지라도 이것은 韓國外交 발전과정에서의 큰 착오였음은 부정할 수가 없을 것이다.

## VI. 韓國과 『臺灣』의 새로운 關係의 摸索

### 1. 쌍방의 政治的 斷交와 '非公式最高關係'의 摸索

#### 가. 政治的 斷交의 意味

한국과 中華人民共和國의 修交, 그리고 中華民國과 關係의 재조정 에 대한 소문은 노태우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꾸준히 제기된 것이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쌍방이 빠른 시일내 수교를 합의한 것은 1992년 4월 북경에서 제3차한국과 中華人民共和國의 외무부장관회담에서였다.

그 이후 쌍방의 교섭은 급속히 진행되어 결국 8월 24일 수교하고, 한국과 中華民國은 단교하고 말았다.<sup>69)</sup> 이 과정에서 한국은 노태우대통령

68) 1993년 5월에 臺北에서 열린 '臺北-서울論壇' 토론회에서 臺北측의 대표인 高英茂 교수는 새로운 관계의 정립의 입장에서 한국측이 地域利益에 부합된 '新中韓關係'를 원한다고 했는데, 中共마저도 '中華民國 存在의 事實'을 인정하여 '辜汪會談'이 열렸었는데, 한국은 왜 '이런 事實'을 무시하여 '官方接觸'을 피하려고 하는지, '그러면 어떻게 亞太利益을 증진할라고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我們正在朝發展兩個對等政治實體的目標努力,不但已放棄漢賊不兩立的原則,未來也接收雙重承認, 韓國爲何乃要依循冷戰時代的美日模式, 道隨一個中國及零和觀念". 中國時報, 1993. 5. 4.

령 임기만의 修交를 위해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中華人民共和國와 北韓關係는 “內政問題”로 간섭않기로 양보하고, 韓國과 中華民國關係 즉 “臺灣問題”는 “國際慣例”인 “一個中國”의 기준에 의하여 양보함으로써 정치적으로 단교할 수 밖에 없었다.<sup>70)</sup>

1992년 8월24일 한국과 中華人民共和國은 수교했으며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의 제3항에서 “一個中國”의 원칙과 “臺灣問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大韓民國政府는 中華人民共和國 정부를 中國의 唯一한 合法政府로 承認하며, 오직 하나의 中國만이 있고 臺灣은 中國의 一部分이라는 中國의 입장을 尊重한다.<sup>71)</sup> (大韓民國政府承認中華人民共和國政府爲中國的唯一合法政府, 并尊重中方只有一個中國, 臺灣是中國的一部分之立場.)

수교성명발표 후 청와대에서 있는 修交背景說明에서는 이러한 원칙의 수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즉

“과거 中國과 수교한 모든 나라가 예외없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한 사실과 국제정세의 현실을 감안해서 하나의 중국의 원칙을 받아들여기로 했지만 지난 날의 대만과의 우호관계를 고려, 공동성명에서 나타난 표현에서 최대

69) “한중수교교섭 幕前幕後”, 신동아, 1992. 10, pp.718-729; “東海作戰을 완수하라”, 월간조선, 1992. 10, pp.388-399. 참조.

70) “韓中교섭 幕後주역 權內鉉대사 인터뷰”, 중앙일보(서울), 1992. 8. 25. 권대사는 기자의 북한문제에 대한 질문에서는 “우리는 양국간의 국교수립한거지 北韓이 어떤가는 논의사항이 아니었습니다”라고 하고, 이어서 “하나의 중국”을 강조한 것에 대하여서는 “우리는 하나의 中國원칙을 확실히 받았습니다. 그건 세계가 받아들인 거니까요. 대신 우리는 이 원칙하에서 뭘 해도 좋다는 中國측의 양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관계제정립에 대하여서는 “하나의 중국원칙 아래서는 백지위임장을 받았습니다. 臺灣과의 비공식관계 협상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라고 하였다.

71) “大韓民國과 中華人民共和國간의 외교관계수립에 관한 공동성명”, 신동아, 1992. 10, p.729.

한 배려를 했다”.

즉 ‘共同聲明’의 ‘제3항에 나타난 문구는 1979년 미.중국 수교 시 나타난 문장과 같은 수준이며 이것은 1972년 일본과 중국과의 수교시에 천명된 입장보다는 훨씬 유리한 것이라’는 것이다. 72)

즉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주장하는 “一個中國原則”이라는 “국제관계”와 우리가 필요한 국가이익을 고려 불가피하게 “國際情勢의 現實”이라는 실리주의에 의하여 ‘中華民國’은 버렸지만 “臺灣과의 우호”를 고려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적인 斷交와 ‘전통적인 우호’의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中華民國을 “臺灣”으로 호칭하면서 미래의 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을 정하였다.73) (1) 臺灣과 最高수준의 非公式關係를 유지하며,

72) “한중수교의 배경설명”, 신동아, 1992. 10, pp.731-732. 中華人民共和國와 각국의 수교공보, 혹은 성명서 중에 나타난 ‘中國主權’과 ‘臺灣問題’에 대한 입장은 다음과 같이 구별되어진다.

유형	中國主權	臺灣問題	該當國家
1.	“中華人民共和國가 중국을 대표하는 唯一한 合法的 政府”라고 承認(recognize)	“臺灣은 中華人民共和國의 一 個省”임을 承認	포르투갈 등 11개국
2.	//	“臺灣은 中華人民共和國의 不可分割의 一 部分”임을 認知(acknowledge)	영국 등 3개국
3.	//	“臺灣은 中華人民共和國의 不可分割의 一 部分”임을 주의(take note of)	캐나다 등 16개국
4.	//	“臺灣은 中華人民共和國의 不可分割의 一 部分”임을 理解와 尊重(understand and respect)	일본, 필리핀
5.	//	“臺灣은 中華人民共和國의 不可分割의 一 部分”임을 尊重	네덜란드
6.	//	“하나의 中國만이 存在하며, 臺灣은 中國의 一 部分”임을 認知	미국
7.	//	수교문서에 언급이 없음	사우디아라비아 등 37개국
8.	수교문서에 언급이 없음	수교문서에 언급이 없음	인도네시아 등 18개국

이상의 자료는 1971년 10월의 中華人民共和國와 1990년 8월의 인도네시아와의 수교까지 94개국과의 수교문서를 분석정리한 것임. 資料: 聯合報(臺北), 1990. 8. 9.

73) 신동아, 1992. 10, p.732.

臺灣이 서울에 설치할 민간조직의 명칭은 駐韓臺北(타이베이)代表部가 될 것임.

(2)臺灣과 맺고 있던 항공 해운동 몇가지 협정은 民間協定으로 전환시킬 예정이며 이에 따라 民間의 協議에 들어갈 것임.

(3)약 3천명의 臺灣거주 우리 국민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구할 예정이며, 또한 우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약 2만3천명의 臺灣人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할 것임.

(4)그 동안 臺灣政府가 갖고 있던 財產 즉 駐韓臺灣大使館건물과 토지는 國際法과 國際慣例에 따라 中國에 所有權이 移讓될 것임.

이러한 한국측의 결정에 대하여 '中華民國' 당국은 8월23일 성명을 발표,

- (1)주동적으로 한국과 斷交를 선포하고;
- (2)對韓國의 일체의 경제무역 優惠를 終止하며;
- (3)9월15일부터 서울과 釜山로선을 폐쇄하며(斷航);
- (4)한국측이 대표를 파견하여 斷交事宜에 대한 설명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더불어 '國家尊嚴, 全民利益, 完整國格, 堅定立場' 등의 원칙을 견지한 '斷然措施'를 취하였다.<sup>74)</sup>

그러나 '中華民國' 당국은 그러한 단교의 결과를 '盧泰愚先生'(이것은 中華民國이 노태우대통령의 정책에 강력한 불만의 표시로 사용함) 등의 소수인들에 의한 '잘못된 선택'이라고 비난을 하면서 '斷交가 斷誼가 아니며', 관계의 재정립을 위해서 1993년에 구성될 새로운 한국정부의 성의를 기대하면서 '북한카드'의 사용을 배제한다라고 하였다.<sup>75)</sup>

#### 나. 새로운 關係의 摸索

74) "全民一致支持政府對韓採取斷然措施", 中國時報, 1992. 8. 23.

75) "臺灣 신문국장 胡志強 인터뷰", 중앙일보(서울), 1992. 8. 27.

양국은 斷交 당시의 기본관계 조정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지난 1년 여동안 大使館은 서로가 넘겨주고, 國旗는 내려지고76), 大使는 철수하였으나, 實務人員은 그대로 상주하면서 통상적인 업무를 지속했다. 中華民國은 9월 15일 한국의 고위사절단을 받아들였으며, 비록 한국실무교섭단의 臺灣訪問은 공개적으로 거절하였으나, 사실상 이 기간 중에 한국의무부의 본부대사인 金太智대사(현재 駐독일대사)가 臺灣을 방문 외교당국과 의견을 교환한 적이 있다.

그 후 세 3국에서 외교당국자들의 실무접촉을 통하여 꾸준히 관계 재정립을 토의해 왔으며, 또한 臺灣관광객의 한국방문 격감77), 한국농산물 臺灣수출격감등의 경제적 타격78)은 있었으나 실질적인 경제관계는 지속적으로 발전하였다.79) 그러나 中華民國이 요구하는 '代表性, 人物' 즉 '官方代表'의 과건과 韓國측의 回避, 대표부의 명칭문제 즉 '國號, 國旗, 國歌' 등의 '政治性問題'에 있어서 쌍방의 타협거부 등으로 쌍방관계를 위한 접촉은 발전이 없었다.

1993년2월 한국의 노태우정부가 물러나고 김영삼정부80)가 들어선

76) 中華民國國旗는 대사관에서는 내려졌으나, 華僑국민학교, 華僑協會, 그리고 中國國民黨韓國支部등에서는 사실상 1993년 2월초까지 내다걸었으며, 中華人民共和國대사관이 명동의 舊中華民國대사관으로 이주하면서 강력한 항의를 제기, 한국정부에서 협조를 부탁하여 내린 것을 합의하였다. 中央日報(臺北), 1993. 2. 2. 그리고 2월 19일 새로입주한 中華人民共和國駐韓大使館, 즉 舊中華民國大使館부지에 위치한 서울 화교국민학교에서는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면서 中華民國國旗를 계양 기념식을 거행하였으며, 50분 후 국기를 내렸다. 中央日報(臺北), 1993. 2. 20.

77) 1993년상반기 중 臺灣관광객은 1992년 상반기의 19만5천명에서 67%가 감소한 6만4천명으로 줄어들었다. 중앙일보(서울), 1993. 8. 25.

78) 대한항공의 손실, 농산물수출의 손실등을 계산할 때, 한국측의 경제적 손실만 지난 1여년동안 3억 달러 이상이라고 한다. 東亞日報, 1993. 11. 27. 따라서 양측의 경제적인 손실을 합하면 상당한 금액이 된다고 볼 수 있다.

79) 단교후 즉 1992년 1년간 쌍방무역총액은 36억달러로(한국이 6억달러후자: 1991년 30.34억달러)증가하였으며, 1993년1월에서 4월사이에도 전년비 11%이상의 무역액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中央日報(臺北), 1993. 7. 19.

80) 김영삼대통령은 대통령후보경선을 하면서 '臺灣'의 李登輝總統이 보내온 '과일수입담판체계'의 고려에 대한 편지할 선거선전용으로 이용한 바가 있다. 따라서 중화민국은 1993년 4월초 臺灣을 방문한 金相賢의원을 통해서 '과일회담'(水果會談)의

이후 '中華民國'은 신임 한승주 외무부장관, 신임 정종욱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 한국 외교담당자들이 '中華民國'을 이해하고 있음을 전제로 쌍방관계의 발전에 정면의 의의가 있음을 전제 관계재정립을 위한 접촉의 단계를 높일 것을 고려하게 되었다.<sup>81)</sup>

1993년 5월 '臺灣'은 서울에서 열린 '제 26차아시아태평양양자이사회'(PBEC)에 경제인을 중심으로한 164명의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하였으며, 이를 기회로 김영삼대통령이 새로운 관계의 발전에 관심을 직접 표시함으로써 6월 중순(14일에서 17일) 쌍방관계정립문제는 제3국인 일본에서 적극적인 '大使級實務會談'의 단계로 발전하였다.

이어서 '中華民國外交部'의 房金炎次長이 1993년 7월 14일 서울을 방문 한국의무부와 직접교섭을 진행하였다.<sup>82)</sup> 그리고 7월 21일 前駐韓中華民國大使등 대표단이 일본의 大阪을 방문 최후의 협상을 진행하여 7월 27일 쌍방관계회복의 기본합의서를 쌍방의 대사급의 署名으로 발표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근 일년만에 쌍방은 '외교관계는 없으며, 단지 民間交流'라는 형식으로 '非正式關係'의 재개를 합의함으로써 '사실상 과거의 우호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하였다. 그 주요한 내용을 보면,

(1) 臺北에 설치될 대표기구의 명칭은 '駐臺北韓國代表部'(Korean Mission in Taipei)로 하고, 서울에 설치될 대표기구는 '駐韓國臺北代表部'(Taipei Mission in Korea)로 한다.<sup>83)</sup>

(2) 대만측은 부산에 대표부지부를 설치하며, 쌍방대표부는 경제,

재개의 가능성을 비추므로서 김영삼정부의 반응을 체크한 바가 있다. 聯合報(臺北), 1993. 4. 3.

81) 中國時報, 1993. 2. 27.

82) 中央日報(臺北), 1993. 7. 17, 中國時報, 1993. 7. 18.

83) 대표부의 명칭에 있어서 영어로 "Mission"(代表部)의 사용은 "Representative Office"(代表處) 혹은 "Office"(辦事處)보다는 한단계 위이며, 서로 명칭상 평등한 입장을 취하기 위하여 中華民國과 大韓民國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후에 설명함. 中央日報(臺北), 1993. 7. 29.

통상, 문화 등 분야의 교류증진 기능을 갖도록 한다.

(3)양측은 기존의 재 협정을 '기타형식'으로 대체하며 그때까지 잠정적으로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

(4)대표부는 상대방국가에 있는 교민보호를 주업무로 하되 정부를 대신해 영사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표부의 직원들은 외교관 특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5)쌍방의 국기는 ('中華民國'의 青天白日旗와 한국의 태극기)는 대표부의 옥외에 달지 못한다.

(6)재산문제와 관련해 한국정부는 부산영사관등 외교적인 재산은 '中華人民共和國'측에 넘겨 주되 비외교적인 재산의 귀속문제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않고 '中國'과 '臺灣'의 현상에 맡긴다는 등이다.<sup>84)</sup>

이어 한국은 駐臺北代表部를 외부부산하의 '國際協力團'(KOICA)의 지사형태로 설치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홍콩총영사관의 이류으로 비자를 발급하는 등 실질적인 영사업무기능을 담당할 것을 결정하였다.<sup>85)</sup> 그리고 11월 25일 한국은 駐臺北代表部를 개관하였다.

이상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결국 한국측으로서는 중공당국과 수교공동성명에서 확인한 '一偶中國'의 틀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입장을 반영한 것이며, '中華民國'으로서는 관계의 단절의 持續이 이로울 것이 없다는 의미에서 일단 기본적인 관계를 정립한 후 이를 바탕으로 관계를 재발전하자는 의미가 깔려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양자관계가 '실질적인 國家關係'로 발전하여, '非公式最高關係'로 발전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특히 한국은 새로운 '駐臺北韓國代表部'의 대표로서 전진임 대

84) 중앙일보(서울), 1993. 7. 27. 中央日報(臺北), 1993. 7. 28. 그러나 中華民國의 발표문에는 (4),(5)항목은 생략되어 있었다. 따라서 中華民國方面에서는 이것은 자기측의 양보로 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 보도도 있었다.

85) 중앙일보(서울), 1993. 8. 17.

사인 군인출신대표를 다시 임명함으로써 아직 '中華民國'과 '臺灣'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에는 斷交 당시와 큰 變化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앞서 말한 것처럼 김영삼정부는 외교의 전문가에 의한 외교를 추진하기 위하여 과거 군사정부시절의 軍人大使를 사임케하는 작업을 했음에도, 바로 몇개월전에 사임케 한 軍人大使를 駐臺灣代表로 임명함으로써 臺灣과 中國大陸의 정치적인 비교평가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을 또 한번 공개하는 착오를 하고 만 것이며, 한국외교정책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

또한 언론에서도 '한·중수교일주년' 기념 특집은 신문방송마다 빼놓지않고 준비했었지만, '中華民國'과의 '斷交'와 臺灣과의 관계문제는 '한·중수교문제'의 부연으로 설명될 정도일 뿐이다.<sup>86)</sup> 세계 제14대 무역국, 세계 제20위의 국민총생산국, 세계 제2의 외환보유국, 세계 제7대투자국이며, 그리고 中國에서 중공정권 다음의 인구 2천1백만을 통치하는 政治經濟實體로서, 전투기, 미사일을 자체생산 배치하는 軍事實體로서 '中華民國'의 존재와 가치에 대하여 지나친 과소평가는 아닌지 한번 반문해보고 싶다.

많은 문제와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中華民國을 대표하는 '臺灣'과 韓國은 과거의 정치적인 관계에서 격하된 '非公式最高關係'라는 새로운 관계의 기본적인 틀을 이제 만들었다. 앞으로 周邊國際環境, 양국의 國內政治環境, 兩國의 統一問題등의 많은 요소들이 양자관계의 발전에 영향을 줄것이다.

中華民國政府는 새로운 對韓半島政策을 적극발전시킬 것이며, 그러한 새로운 관계는 '非公式的' 두개의 韓國政策'으로 中華人民共和國의 '公式的' 두개의 韓國政策'과 경쟁하면서 남북한에 대한 동시의 등거리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전략으로 직접간접의 격렬한 對韓半島政策競

86) 韓·臺灣斷交의 후유증", 중앙일보(서울), 1993. 6. 25.

爭을 할 것이다.

## 2. 中華民國의 적극적 對內外政策의 發展

### 가. 적극적인 對外政策의 發展 - 南聯, 西和, 北進정책

지난 40여년간의 反共同盟이자, 세계각국의 中華民國冷待政策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중요한 지지자로 남아있던 韓國의 斷交과정에서의 處事에 대하여, 이해는 하면서도 지극히 섬섬함을 금할 수 없었던 中華民國은 감정적인 대응만이 아닌 실질적인 반응으로 새로운 국제활동공간의 국면전환을 시도하였다.

中華民國은 그러한 정책을 南아시아, 越南(월남의 가장 큰 투자국은 中華民國이다)등과 관계를 강화하는 '南聯政策', 미국, 일본, 유럽, 그리고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의 구소련으로 부터 독립한 국가들과의 관계를 증진하는 '北進政策', 그리고 臺灣海峽兩岸의 평화적인 관계를 추진하는 '西和政策'이라고 말한 바가 있다.<sup>87)</sup>

비록 한국과의 斷交가 내적으로 충격이 컸고, 臺灣獨立運動등에 명분을 강화해주고, 李登輝총통의 지도력에 상당한 타격을 주었지만, 한국과 단교로 인한 충격은 적극적인 대내외정책으로 아주 빠른 속도로 감소되어졌다. 특히 남북으로 분단된 韓國의 동북아의 정치세력으로서, 혹은 세계경제의 실체로서의 限界能力이 분명하였기에, 韓國과 斷交가 中華民國의 生存과 國際行動에 대한 실질적인 충격도 제한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다.

따라서 中華民國은 對美, 對日, 대러시아, 對유럽과의 관계를 강화

87) 이 말은 현재의 中華民國外交部長의 발언을 인용한 것이다.中央日報(臺北), 1993. 5. 13. 政治와 經濟를 결합시킨 '南聯, 西和, 北進'의 中華民國의 對外政策發展 주장의 구체적인 내용은 李文志, "臺灣의 亞太戰略---南聯, 西和, 北進", 許介顯, 李文志等 著, 臺灣의 亞太戰略 (臺北: 國家政策研究中心, 1991), pp.97-146.

함으로서 국제적인 실질적인 활동공간을 넓히고, 중공정권을 견제하면서, 對大陸政策을 더욱 개방하여 臺灣海峽兩岸의 긴장을 완화함으로써 평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려고 하였다.

미국과의 관계에서 美國의 對中共牽制的 戰略的 요인과 미국내 고용창출등의 경제적인 유인을 이용, 한국과 단교한 직후인 1992년 9월 2일 대만에 F16전투기 150대의 구매결정을 받아 내었다. 이것은 미국이 1982년 중공정권과 서명한 '8. 27公報'로 취해 온 臺灣에 대한 禁輸措置를 해제하는 중요한 사건이기도 했다.<sup>88)</sup> 그외에도 미사일 순양함의 貸貨판매<sup>89)</sup>, 무기판매의 하한선의 폐지등으로 美國과 臺灣의 관계는 더욱 공고해졌다.

또한 대만 당국은 러시아의 새로운 대내외정책과 경제적 요인을 이용 1992년 9월 8일 대표부 설치에 합의 40여년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게 되었다.<sup>90)</sup> 아어서 9월 22에는 관광, 항공, 경제교류를 촉진하는 내용의 '臺灣-러시아' 간의 3개의 의정서에 서명함으로써<sup>91)</sup> 중공정권 배후의 러시아와 새로운 관계를 발전시키게 되었다.

유럽국가들과는 '6年國建'의 경제적인 요인을 이용 다각도의 관계 발전을 시도했으며, 특히 英國과 중공의 홍콩문제에 대한 갈등을 적절히 이용 대유럽관계의 전환을 시도하였다. 프랑스, 독일등도 臺灣에 전투기, 구축함, 탱크등의 판매를 결정하였으며, 영국과 프랑스, 독일등은 각각 대만과 항공회담을 열어 航線과 航權에 대한 새로운 협상을 진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국과 프랑스는 臺灣대표부를 격상하였다.<sup>92)</sup>

88) 동아일보, 1993. 9. 4; 조선일보, 1993. 9. 4.

89) 1993년 10월초에 미국으로부터 3척의 크로스킴미사일순양함을 임대형식으로 들여와서 실전에 배치되었다. 中央日報(臺北), 1993. 10. 8.

90) 한국일보, 1992. 9. 9.

91) 조선일보, 1992. 9. 23.

92) 영국은 과거에 Anglo-Taiwan Trade Commite를 British Trade and Culture

또한 유럽공동체(EC)는 1993년 5월28일 대만의 국제 정치경제적인 地位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즉 이 결의안은 '臺灣의 西太平洋地域에서의 정치적인 중요성'을 인정하였고, 유럽공동체의 각 회원국들은 臺灣과 현실적인 입장에서 政治, 文化 그리고 經濟貿易등 쌍변 관계를 강화할 것과, 臺灣의 '무역과 관세에 관한 일반협정(GATT)', '국제통화기금', '경제합작과 개발기구(OECD)등의 가입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협력할 것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sup>93)</sup>

이러한 적극적인 外交로 1992년 1년동안 대만과 외교관계가 없는 48개국의 123명의 장관들이 臺灣를 방문하는 활발한 대외관계를 발전시켰다. 그리고 1971년 聯合國에서 퇴출한 이후 다시 聯合國에 가입하는 시도를 시작하였다. 비록 중남미의 7개국이 發議는 했으나 역부족으로 1993년에는 실패하였지만 계속 이 문제를 국제활동공간의 발전을 위해서 추진할 것이 분명하다.

또한 '남련정책'의 일환으로 1994년 초 이등위총통이 신정휴가를 핑계로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등 동남아시아 중요국가에 대한 '휴가 외교'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비록 한국과 단교로 형식상 비할 바 없는 외교적인 打撃을 입었지만, 중화민국은 '남련정책'을 통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개선, '북진정책'을 통한 유럽, 미국과 러시아와의 관계개선으로 대외정책상 實利的인 意味에서는 이미 타격의 극복 이상의 성과를 얻었다고 볼 수가 있다. 실질적으로 韓國이 臺灣의 安全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은 한계가 있으나, 미국이나 러시아는 중공세력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국제력량이기 때문에 그들과의 관계개선은 臺灣의 安보와 국제전략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가 있다.

Office로 바꾸어 직접 國名을 쓰고 그 기능도 강화하였다.  
93) 中央日報(臺北), 1993. 5. 30.

### 나. 大陸政策의 積極化

한국과 단교 직후 9월초 대륙과의 관계에서도 '서화정책'의 일환으로 臺灣船舶의 중국대륙운항을 비롯 대기업의 대륙투자, 제3국을 통한 송금의 허용, 정부관리의 대륙방문의 허용등 367개항의 광범위한 개방을 확대하였다.<sup>94)</sup>

臺灣海峽兩岸의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內外環境의 변화에 적응하고 동시에 이를 통해 긴장을 완화함으로써 韓國과 中共政權의 修交와 그로 인한 斷交가 가지고 온 內외의 衝擊을 적극적인 방법으로 대응하고져 하였다. 이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韓國의 中國大陸에 대한 적극적인 경제공세로 인한 경쟁적인 손실을 막아야 한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다.

그리고 1993년 4월말에는 臺灣海峽兩岸의 44년의 격리와 대결을 담판의 구도도 바꾸는 전기가 마련되었으니 그것은 바로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辜汪會談'이라는 쌍방 민간대표와 양안관계의 事務性會談이었다. 그동안 정치적인 '三不政策'으로 금기시 되어온 對話가 시작된 것이다. 비록 정치적인 담판은 아니었지만 새로운 兩岸關係의 시작이었으며, 양안관계를 직접대화해 풀어보려는 정치적인 노력이었다고도 볼 수가 있다.

결국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대만의 집권당인 國民黨은 내적으로 구조적인 장기집권의 병폐를 개선하기 위한 개혁을 가속화함으로써 내부정치적인 곤경을 대처하고 있다. 黨의 分裂과 야당의 도전등의 정치적인 압박이 가중화되고 있지만, 대만의 정치적인 민주화는 외적인 충격 속에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94) 中國時報, 1993. 2. 20.

## VII. 『臺灣』의 對北韓關係의 摸索과 發展

### 1. '北韓카드'의 가능성의 摸索

對韓國政策과 직접상관된 정책으로서는 對北韓關係의 강화도 그러한 적극적인 대외관계의 개혁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할 수가 있다. '中華民國' 당국은 직접적으로 '북한카드'로 한국을 견제하겠다고 한 적은 없으나 북한과의 관계개선의 필요성은 한국의 對中共집근의 가속과 비례하여 강조되어져 온 것이기도 하다. 물론 한국측에서도 자신의 중공정권의 접근의 명분찾기를 위해서 中華民國의 북한집근을 북한의 開放促進이라는 의미에서 반대하지 않았었다.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국대륙의 대외개방과 한국의 '北方政策' 그리고 국제적인 和解무드 속에서 한국과 중공정권의 상호관계의 발전이 가속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中華民國當局은 뚜렷한 韓國의 中共政權에 대한 접근에 견제카드가 없는 입장에서 한편으로는 경제적인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韓國의 中華民國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 화계와 경제계를 중심으로 제기된 北韓과의 關係發展問題를 전향적으로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80년대 중기 이후 동부유럽등 공산국가에 대한 교류를 개별적으로 허용하여 왔지만, 北韓에 대하여서는 韓國과의 관계를 고려중래의 정치적인 입장을 고수하면서 직접교류자체도 유보하는 정책을 취하였다.

하지만 한국의 급속한 중공정권과의 교류는 中華民國의 북한에 대한 개방을 촉진하게 될 수 밖에 없었다. 1988년 中華民國經濟部の 貿易局에서 제시한 한 보고서에는 臺灣海峽兩岸關係의 緩和 그리고 '南韓과 中共' 경제무역관계를 발전시키는 情勢 아래서 中華民國정부가 北韓貿易政策의 放寬을 고려해야 함을 주장하고, 동시에 북한의 경제무

역관계자료를 수집함으로써 필요한 시기에 雙方의 직접무역의 길을 개방할 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가 있다.<sup>95)</sup>

中華民國當局은 이에 '臺灣進出口公會'의 대외무역개척의 방법으로 對北韓經濟貿易關係를 개척하기로 하고, 1989년 蘇聯考察團을 파견하면서 동시에 北韓貿易考察團을 파견하기로 했으나 당시 대륙정세등을 고려 파견하지 않았었다.

1990년 3월 소련과 동부유럽에 대한 直接貿易거래를 결정하면서 北韓과 쿠바양국에 대하여서는 '間接貿易關係'만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당시 中華民國이 제시한 이유는 (1) 中華民國과 北韓간에는 특별한 경제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2) 中華民國의 기업과 북한은 왕래가 없었으며, 북한이 臺灣商人들의 북한방문 비자를 발급한 적도 없으며; (3) 북한의 政治體制가 孤立保守적이므로 外人의 직접접근은 쉽지 않으므로 개발조건도 구비하지 못하였다는 것이었다.<sup>96)</sup>

이어서 4월 '中華民國進出口公會'가 북한의 대외적인 관광개방의 기회를 이용하여 北韓考察團을 파견하려고 하였으나, 북한의 비자발급의 거절로 실현되지 못하였었다.<sup>97)</sup> 당시 한국과 중공정권관계의 발전을 관망하고 있던 북한으로서는 '臺灣問題'로 인하여 중공당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 이유가 없었으므로 유보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다.

## 2. 對北韓關係의 發展: "經濟的 交叉承認"의 摸索

6.4 天安門事態로 인한 서방국가의 中共制裁에도 불구하고 韓國은 이듬해 1990년 9월의 북경아시안게임을 기화로 더욱 적극적으로 쌍방

95) "漢城取大陸行, 臺北走北韓線", 中國時報, 1988. 11. 6. 聯合報(臺北), 1988. 10. 31.

96) 中國時報, 1990. 9. 27.

97) 星島日報(香港), 1990. 4. 24.

관계를 발전시키고, 또한 9월 30일 소련과 수교에 이어 10월 20일 中國大陸과 民間貿易사무소의 개설을 합의하는 등 한중관계를 둘러싼 주변 정세가 급변하였다.

이에 臺灣에서는 '中共, 南韓', '臺灣, 北韓'의 '經濟交叉承認'이라는 새로운 對韓半島政策의 주장이 등장하였다. 즉 中華民國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과 중공이 民間貿易事務所의 개설을 합의한 이상 한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유보한 北韓과 경제관계의 발전을 더 이상 유보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보았기 때문이다.<sup>98)</sup>

北韓으로서도 中共의 韓國에 대한 급속한 접근으로 臺灣과 非政治的 關係를 발전시킬 충분한 名分을 축적했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1988년 7.7선언 이후 友邦國家의 北韓과의 貿易不反對를 천명하였고, 중공과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던 韓國의 입장에서는 中華民國의 對北韓접근을 반대할 이유가 이미 없었다.

따라서 북한은 마카오의 '朝鮮, 澳門國際旅行有限總公司'를 통하여 1990년 11월 北韓을 訪問考察하려는 中華民國工業團體立法委員인 張世良一行에게 입국비자를 발급해 줌과 동시에 臺灣人들의 북한방문비자를 개방할 것을 결정함으로써 쌍방관계의 직접교류의 길이 열렸다. 立法委員張世良과 한국문제전문가, 경제인들 포함한 臺灣의 北韓考察團 일행은 11월26일 북한관광비자를 얻었다.<sup>99)</sup>

한편 이 보다 며칠 앞서 11월23일 中華民國行政院은 정식으로 北韓에 대한 直接貿易을 허용한다고 발표하면서, 북한의 對中華民國의 經濟貿易활동은 '比照一般自由貿易國家辦理'한다고 결정하였다. 이러한 정책배경으로서 중공과 남한이 무역관계를 발전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한이 이미 상호 직접 왕래하고 있으므로 中華民國과 北韓의 교류

98) "亞運效應催化中共, 南韓 臺灣, 北韓經濟交叉承認即將形成", 中國時報, 1990. 9. 24.

99) 中國時報, 1990. 11. 4, 5, 8, 9, 10참조.

도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sup>100)</sup>

사실 1990년 1월에서 10월까지 쌍방무역거래의 총액은 臺灣의 북한물건 수입 2백60만달러였을 뿐이었지만, 雙方關係는 이로부터 韓國과 中華人民共和國關係의 발전에 비교되어지면서 直接交流라는 새로운 發展이 가능하여진 것이다. 그리고 일반 대만 주민들의 북한관광도 가능하게 되었다.<sup>101)</sup>

中華民國은 한편으로 韓國과 기존관계유지를 위한 다방면의 외교를 전개하면서, 중공과 한국관계의 변화를 관망하면서 대북한관계발전의 進度를 조정하여 나갔다. 1992년 4월 18일 臺北의 언론매체에 '陳特事業機構董事長陳源發'이름으로 된 북한의 金日成의 '萬壽無疆'을 비는 80세의 생일축하광고가 나왔을 때, 중화민국 정부당국은 '民間禮尚往來'에 대하여 정부가 그러한 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sup>102)</sup>

### 3. 한국과 斷交와 북한과 경제관계발전

1992년 5월 한국과 중공당국의 정식 修交談判의 정보를 입수한 것으로 믿어지는 中華民國은 6월초 북한대표단을 받아들여 경제관계를 협의하였다고 한다. 北韓은 특히 한국과 중공이 修交를 합의하기 직전에 정무원부총리이자 대외경제책임자인 김달현을 7월 19일에서 25일까지 극적으로 南韓을 訪問케 하여 經濟協力을 모색하는 적극성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6월 5일 노동당과 경제관계의 중요한 간부 대표단을 이끌로 臺北을 '극히 비밀리' 방문하여 '臺灣'과 경제협력관

100) 經濟日報(臺北), 1990. 11. 23; 1990. 11. 24.

101) 예를 들면, 대만의 최대일간지인 聯合報(1991. 12. 6)에는 "北韓商務考察團7天", "北韓,東北三省米雕盛會12天", "平壤,妙香山,開城,板門店,北京+東北三省"등의 觀光, 商務旅行광고가 나기도 하였다.

102) 自由時報(臺北), 1992. 4. 19.

계를 모색케 하였다고 한다.<sup>103)</sup>

또한 8월 18일 즉 한국과 수교를 발표하기 4일전 북한과 중공은 평양에서 제 33차 과학기술합작교류회의를 거행하고, 약 48개 항목에 달하는 '中朝科學技術合作交流議定書'에 서명하였다.<sup>104)</sup> 이것은 중공과의 수교일정의 관계로 '中華民國'과의 연례의 '經濟會議'를 취소한 한국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자세이다.

이러한 北韓의 주동적인 南韓과 臺灣에 대한 경제관계의 모색도 韓國과 中共의 수교에 대한 사전준비적업이었음은 부정할 수가 없으며, 사전에 중공당국과 충분한 협의하에 진행된 것만이 분명하다.

그러한 북한과 대만의 고위회담의 결과 6월 12일 中華民國의 '國貿局'은 '臺北進出口貨品之檢證規程一律比照一般國家辦理, 不必再項項事先向國貿局辦理輸出入許可證'<sup>105)</sup>를 발표, 對北韓貿易에 대한 事前許可制度를 폐기하였다. 이로써 쌍방의 무역의 자유로운 발전이 가능해졌으며, 이미 시작한 中華民國國民들의 북한관광이 더욱 활발히 진행되게 되었다.

臺灣과 北韓關係의 발전은 북한과 중공정권과의 전통적, 그리고 전략적인 關係維持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즉 臺灣과의 경제관계 발전으로 인한 中共과의 정치적 관계의 손실은 北韓으로서는 바라는 바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南韓과 관계를 정상화한 중공으로서는 북한에 대하여 臺灣과의 非政治的인 경제등의 관계까지도 제한을 요구할 명분이 없을 것이다.

103) 自由時報(臺北), 1993. 8. 22.

104) 人民日報, 1992. 8. 19. 日本 日朝新聞(1992. 9. 26) 중공당국은 한국과 수교한 이후, 북한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北韓의 臺灣과의 관계발전이 자체를 요구했으며, 특히 중공측의 '一個中國原則'을 지지하는 댓가로 북한과의 전통관계를 절대로 변화하지 않으며, 북한이 필요한 武器와 경제지원을 약속했다고 보도한 것은 이 협정과 상관된 것으로 보여짐.

105) 聯合報, 1992. 6. 13.

中華民國방면에서도 북한과 中共政權의 전략적 동맹으로 인한 자신과의 관계발전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며, 때문에 정치적 관계의 발전의 희망은 단기적으로는 없다는 것은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 때문에 한국과 단교하면서도 北韓카드를 쓰지 않겠다고 말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中華民國과 北韓은 미래에 경제관계를 중심으로 상당한 발전의 공간이 있음은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다. 때문에 中華民國은 韓國과 斷交 이후 부단히 북한과 경제관계를 발전시키는 시도를 하고 있다.

北韓도 이에 부응하여 在美北韓人の '金剛山貿易公司'를 통하여 臺灣에서 영사업무를 행사할 民間事務所開設를 모색하는 등 쌍방관계의 발전을 추진해왔다고 한다.<sup>106)</sup> 물론 대만 외교부는 이 뉴스를 부인한 바가 있다. 그러나 쌍방의 경제관계는 그 후에도 꾸준히 발전하고 있으며, '中華民國國際貿易協會'을 중심으로 북한의 대외무역진흥기구인 '高麗民族產業發展協會'와 협조하여 北韓經濟考察團을 계속 북한에 파견하여 상호관계의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1993년 7월 28일에는 40여년 만에 처음으로 北韓선박이 대만에 기항하고 臺灣産의류를 싣고 북한으로 돌아갔으며,<sup>107)</sup> 또 中華民國 입법위원인 辜福本이 북한을 방문(9월초) 姜成山 정무원총리와 회담하고, 북한의 국영사업진흥회사의 간부 3명이 10월초 臺北를 방문 외교부장, 경제부장등과 회담한 후 領事機能을 지닌 '貿易會社'형식의 대표부원내설치를 합의했다는 보도도 있었다.<sup>108)</sup>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中華民國의 결국은 남북한과 경제적인 '두개의 한국'의 '交叉承認'이라는 관계구조를 발전시키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

106) 朝鮮日報, 1992. 10. 22; 聯合報, 1992. 10. 16.

107) 동아일보, 1993. 7. 27.

108) 조선일보, 1993. 10. 12.

## VII. 結 論

### - 새로운 雙邊關係의 發展을 위하여 -

#### 1. 雙邊關係의 現實

지난 1993년 11월 25일 駐臺灣韓國代表部の 개설을 전후하여 한국의 주요일간지에는 臺灣相關 뉴스가 실렸다. 즉 中央日報(서울)은 “臺灣과의 관계개선 의지 있는가”라는 대만북파원의 보도에서 斷交 후 15개월 만에 새로운 代表部를 개설하는 자리에 臺灣의 人士는 한명도 초대하지 않았으며, 그 이유가 한국외무부의 金永三大통령의 ‘호화행사지양’이라는 지침에 따른 ‘縮小行使’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것은 한국외무당국의 고의적인 ‘축소’ 같았다고 하면서 그러한 의도는 사전에 한국상사 자사등에 일체의 화한을 사양한다는 통보를 했고, 한국업체들이 대표부 개설 경축광고마저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는 것에도 나타난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중공과의 관계를 고려 ‘臺灣에 관한 政策을 모두 “縮小指向”으로 물고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게 했다고 보도했다.<sup>109)</sup> 사실 1993년 8월 24일 한국의 몇개의 대기업들이 人民日報 특별 전면광고를 아용 ‘中韓建交一周年’을 경축한 것과 비교되어질 수가 있다.

한편 東亞日報의 한 칼럼에서는 1993년 10월 10일 中華民國國慶日인 雙十節의 서울기념식을 떠올리면서, 그 날 서울의 ‘臺灣교민회’가 주최한 기념리셉션에는 지난해 斷交 후 열린 기념식때 보다 더많은 한국인들이 초청되었으므로 ‘역시 중국인들답다’라는 감탄이 한국인들로부터 우리나라왔던 사실을 보도하면서, ‘서울의 臺灣代表部도 곧 문을 다시 열어 지난날의 경계 문화교류와 友誼를 되찾았으면 한다’로 끝을

109) 中央日報, 1993.11.26.

맺었다.<sup>110)</sup>

이 두 칼럼의 내용이 바로 斷交 후 一年이 지나, 새로운 관계구조를 정하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韓國과 中華民國當局의 상호관계의 발전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臺灣측은 한국과 관계개선의 강한 의지를 보인 반면, 한국측은 지금 北韓核問題등으로 中共의 協助가 절실한 판에 臺灣과의 새로운 관계 청빙을 하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조금이라도 中共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

韓國을 현재 中國大陸과의 관계와 비교할 때, 정치, 경제, 안전 어느 면에서도 臺灣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認識하고 있다고 말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中華民國에게 韓國의 존재도 자신의 統一問題와 국가의 생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력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상호관계의 필요성과 가치는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다.

## 2. 雙邊關係의 發展을 위하여

大韓民國과 中華民國의 政治的 關係는 끝이 났으나 臺灣과 韓國의 非公式最高의 關係는 이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地政學的 環境, 혹은 周邊의 國際戰略環境, 혹은 經濟環境을 보더라도 한국에게 臺灣의 中華民國은 大陸의 中華人民共和國의 重要性과 비교되어질 수가 없으며; 中華民國에게 韓國도 자신의 統一問題와 國家의 生存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뿐이다.

그러나 東北亞의 國際環境 속에서 南韓과 中華民國은 強國도 아니며 또한 分열국가이므로 열강의 相互戰略均衡政策이나 혹은 相互利益

110) 東亞日報, 1993. 11. 27.

을 위한 妥協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따라서 生存과 發展을 위하여 政治關係를 포함한 實質關係를 유지하면서 協助할 절대적인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이미 1993년 7월 確정한 새로운 쌍방關係를 기초로 쌍방의 '實質國家關係'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그 노력의 방향은 아래와 같다고 본다.

#### (1) 認識의 大轉換이 必要

兩國은 새로운 關係發展을 위하여 서로에 대한 認識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한다고 본다. 즉 쌍방은 자신의 對外政策에 있어서 상대방의 필요성, 중요성, 그리고 役割을 過去와 現在問題, 그리고 未來의 發展에 비추어 다시 전반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問題는 광범한 研究討論을 통해서 解決되어져야 한다.

#### (2) 韓國의 對臺灣海峽兩岸中國에 대한 政策

韓國은 지정학적인 전략의 고려에서 中華民國의 무시하고, 中國大陸의 中原政權을 중심으로 中國問題를 사고하는 태도와 政策의 再考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中國의 前途를 中共政權의 미래와 동등시 하는 認識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90년대 이전과 달리 현재 교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통일문제를 포함한 臺灣海峽兩岸의 政治, 外交, 經濟發展등의 '中國問題'는 이미 中共政權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 따라서 미래의 對臺灣海峽兩岸中國과의 關係發展에 있어서 아래의 몇가지 방향에서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첫째, 中華民國의 실체를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中華民國은 세계 제14대 무역국, 세계 제20위의 국민총생산국, 세계 제2의 외환보유국, 세계 제7대투자국이며, 인구 2천1백만에 전투기, 미사일을 자체생산배치하는 政治經濟軍事實體이다. 中共政權은 비록 '一個中國'과 '一國兩制'을 주장하지만, 이미 中華民國의 정치와 경제상의 존재의 의의를 전부 否定하고 있지는 않고 있으며, 단지 政治的 統一을 위해 中華民國의

政治實體를 부정할 뿐이다.

둘째, 北亞의 國際勢力의 分布의 각도에서 '中華民國'과 臺灣의 戰略적인 의의를 정확히 평가해야 한다. '中華民國'은 중공정권을 견제할 수 있는 중국내부의 가장 큰 政治實體일 뿐 만아니라, 臺灣은 동남아와 동북아, 서태평양의 戰略要衝이다. 中華民國의 미래는 홍콩의 미래와 더불어 서태평양과 東亞의 세력균형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기에 궁극적으로 韓半島의 전략균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세째, 經濟적인 '臺灣經驗'과 현재 발전중인 多黨制民主制度가 중심이 된 政治적인 '臺灣經驗', 그리고 中國大陸의 '평화적 演變'을 위한 '開放'을 중심으로한 大陸政策, 1997년 홍콩주권반환, 이러한 것들과 상관된 英國, 美國등 국가들의 中共牽制政策과 對臺灣關係의 格上등등이 臺灣海峽兩岸關係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正確히 평가해야 한다.

네째, 통계적인 수치만으로 '中國大陸'을 인식하지 말아야 하며, 中國大陸의 社會主義現代化가 가지고 온 大陸社會의 變化, 中國大陸政治構造의 變化, 그리고 이런 것들과 상관된 中華民國의 미래 중국문제에 있어서의 의의를 신중하게 평가해야 한다. 만일 南北韓關係의 경험적 인식에서 臺灣海峽兩岸關係를 본다면 그것은 현실과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다. 즉 중공정권의 통치기초와 미래변화의 정확한 평가를 기초로 한 탄성적인 中國政策이 필요하다.

다섯째, 한국은 이미 修交시에 中華人民共和國과 北韓關係를 그들의 '內政問題'로 인정하였고, 韓國과 '臺灣關係'는 中共政權이 인정한 범위 아래서 '最高의 非公式關係'를 유지할 것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전한반도의 主權은 韓國의 것임이 헌법에 명분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중공과의 수교를 위하여, 南北韓의 현실인식에 기초하여 행한 讓步는 필요할 때 언제든지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대만해협양안의 중국에서 가장 큰 두개의 政治實體는 中華人民共和國과 中華民國이다. 이것은 中華人民共和國이 인정하건 안하건 간에 하나의 존재적인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中共政權에 대한 최고의 정치적인 견제카드는 바로 臺灣의 中華民國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미국이 臺灣과 실질국가관계의 유지를 위하여, 臺灣과의 관계를 국내법인 '臺灣關係法'으로 재정 中華人民共和國의 '內政干涉'이라는 口實을 배제하고 있는 것도 참고로 고려해 볼만하다. 또한 남북한 관계를 기준으로 필요할 때에는 '中華民國'이 현재 주장하고 있는 '雙重承認'의 문제도 전향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한다. 즉, '獨立的對臺灣政策'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3) 中華民國의 對韓半島政策

中華民國은 對韓國政策을 결정할 때, 過去事보다는 韓國의 現實問題와 北方政策의 필요성을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사실 한국과 中共이 修交한 후 中華民國의 입장은 韓半島에서 아주 불리하다는 점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다른 각도에서 보면 韓半島는 中華民國이 中共政權과 競爭할 수 있는 새로운 무대를 제공해 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

中華人民共和國은 東北亞의 戰略均衡과 평화적인 환경을 위해 韓半島가 필요하며, 또한 경제적으로 韓國이 필요하다. 한편으로 북한 즉 '朝鮮'과의 정치전략관계를 증시해야 하고, 또 한편으로 韓國과의 정치경제관계를 증시해야 한다. 따라서 중공정권의 그러한 '두개의 한국정책'은 남북한이 요구하는 것과 상당한 矛盾이 있다. 中華民國은 韓半島에서 中共政權과 경쟁할 때, 그러한 중공정권의 對韓半島政策에 있어서 모순을 확실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韓國과 中國은 통일을 국가지상과제로 삼고 있는 分裂國家이다. 따라서 미래의 4개의 政治實體의 상호관계에는 많은 불확실한 요소가 政策의 方向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中華民國과 국민들은 斷交하는 그날 부터 韓國의 言論, 時事評論 등에서 등장한 일반한국인들과 지식인들의 중공정권과 수교하면서 中華民國과 단교하는 것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주의할 필요가 있다. 中華民國은 대한국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러한 한국민들의 感情과 友誼를 중요시 하여, 광범한 政治, 經濟, 학술문화계의 紐帶關係를 재고하는 조치와 조직을 발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對韓半島認識과 政策을 현재 진행중인 '경제적으로 남북한을 交叉承認' 하는 對韓半島政策과 결합하며, 더 나아가서는 이를 '南聯, 西和, 北進'의 對外政策과 배합한다면 멀지 않은 미래에 예상한 것보다 훨씬 큰 政治的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4) 雙方的 經濟關係

상방의 새로운 關係構造에서 보면 가장 유리한 것이 經濟關係의 발전이다. 경제관계의 발전은 韓國이 대단히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관계에 있어서 競爭的인 것보다 相互補完의 원칙을 강조한다면 앞으로 아주 큰 발전의 공간이 있다고 볼 수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臺灣'과 북한간의 경제관계의 발전은 한국이 現在 進行 중인 北韓을 開放하고 평화적인 演變을 추구하는 政策과 상호 부합함으로 장려되어져 하며, 특히 두만강개발계획, 나진·선봉자유무역지대에 대해 臺灣資本의 기회는 아주 크다고 볼 수가 있다. 韓國의 政治經濟發展經驗과 중국대륙에 대한 투자와 거래는 中國大陸의 現代化와 평화적인 演變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본다.

또한 동북아경제권, 혹은 APEC등의 國際적인 多者間協力體 속에서 양국은 이미 장기간의 競爭과 協助의 경험이 있으므로 경제상 異中求同과 협조의 공간이 아주 크다. 예를 들면 양국은 서로 협조하여 중국대륙, 미국과 일본의 經濟的 압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하여 한국은 1991년 11월의 서울 APEC총회에서 세계의 中國人經濟體制의 동시가입을 주선한 '원숙한 외교'를 다시 진일보 발전시키는 기회를 다시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국제관계에서 경제의 중요성은 절대적이며, 동시에 經濟交流가 예상한 것 보다도 훨씬 큰 政治上의 '溢出(spill-over)효과를 가져와서 政治關係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가 있다.

#### (5)쌍방의 社會文化人的 交流關係

새로운 쌍방관계의 발전에 있어서 經濟적으로 진일보한 合作關係를 발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社會文化등의 영역에 있어서도 組織에서부터 宣傳에 이르기까지 과거와 다른 노력의 投入이 요구되어진다.

中華民國은 과거보다 규모를 확대하고 새로운 설비와 정보를 구비한 中華人民共和國의 것보다 큰 '文化中心'을 서울에 세울 필요가 있고, 이와 동시에 각종 해외교류학술기금을 활용 한국과의 학술교류활동을 지원함으로써 文化學術界의 인맥을 계속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 점에 있어서는 中華民國이 中共보다 훨씬 유리하다.

韓國도 만약 中華民國과의 관계발전을 다시 생각한다면 현재 대북 대표부의 모단체인 '國際協力團'의 자금과 조직을 활용 臺灣에서 사회문화관계의 유지를 위해 組織을 확대하고 相互交流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한·중학술회의', '臺北-서울포럼'등 學術會議와 각종 友好協會를 적극 활용하고, 조직도 확대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새로운 '新世代臺北-서울포럼'을 조직함으로써 이를 통하여 신세대청년과 사회엘리트간의 상호교류활동을 증진시켜야 한다. 특히 유학생의 交流에 이왕보다 더 많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본다. 동시에 쌍방관계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전문서적의 다각적인 出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社會文化의 交流가 政治認識을

바꿀 수가 있는 최고의 방법이며, 中國人과 韓國人의 우호관계를 돈독히 하는 기초가 될 수가 있다.

(6) 中華民國의 '務實外交'와 韓國의 '열린외교'의 共助

中華民國의 '自由, 民主, 均富'을 추구하는 中華振興의 國家戰略과 '務實外交'는 韓國의 신정부가 주장하는 '民主, 自由, 福祉, 人權' 등의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國家戰略과 '積極外交', '열린외교'와 그 가치와 대방향에 있어서 서로 일치한다. 동시에 쌍방은 과거 70여년의 共同抗日, 共同反共의 경험과 더불어 내적인 경제발전, 國家現代化와 政治民主化 등의 과정경험에서 많은 공유할 것과 서로 배워야 할 것들이 있다. 이러한 경험은 고귀한 것이며, 現實主義外交政策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단순한 外交專門家가 완전히 처리할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쌍방은 그러한 經驗을 서로 배우고 쌍방관계의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최고의 정치지도자, 외교관 등 각방면의 전문가와 실무자들이 현재의 상호관계의 틀 속에서 자유롭게 연락교류하는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심가꿀 수상인 '李光耀의 休暇外交'를 원용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 과거의 광범한 경험에 中華民國의 '務實外交'와 韓國의 '적극, 열린외교'의 원칙을 배합한다면 그러한 새로운 틀의 발전은 불가능한 것이 아닐 것이다.

(7) 미래의 韓半島와 中國關係

이제 동북아시아는 1840년 아편전쟁이 시작된 이래 지속되어 온 傳統과 現代化의 갈등, 서구세력의 侵略과 그로 인한 이데올로기, 전략적인 衝突, 域內의 戰爭, 內戰 등의 긴 고난의 역사를 마무리하면서 21세기를 맞이하는 關鍵적인 시기에 처해 있다. 21세기의 동북아국제사회의 平和와 각국의 繁榮發展을 위하여 모든 국가는 각국의 國情에 의거하여 自由, 民主, 福祉, 그리고 人權이 보장되는 새로운 價値와 行

動規範을 발전시켜야 한다.

이러한 價値와 行動으로 통일된 韓國과 中國만이 善隣友好關係를 眞正으로 발전시킬 수가 있을 것이며, 이것이 바로 미래의 韓國과 中國의 상호관계를 위한 패러다임이다. 이러한 패러다임에 기초하여 한국과 中華民國은 근시안적인 利害衝突을 극복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理想과 現實을 고려하면서, 現在 양국이 직면한 問題들을 하나 하나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世界化, 多變化, 多元化, 地域協力, 未來志向'의 '韓國의 新外交의 5대기조'의 극대화를 위하여서는 臺灣海峽兩岸關係의 構造를 최대한 活用하여 中國大陸의 中華人民共和國과 臺灣의 中華民國과 關係를 동시에 발전시킬 수 있는 知慧와 勇氣가 필요하다고 본다.